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관련 자료집

1994. 12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목 차

1. 평화협정의 정의	3
가. 국제법적 정의	3
나. 북한측 정의	3
다. 우리측 정의	5
2. 북한의 「평화협정」제의 연혁과 대응	6
가. 남북평화협정 체결제의	6
나. 대미평화협정 체결제의	7
다. 우리측의 대응	11
3.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수립 제의	15
가. 상 황	15
나. 북한측 의도	16
다. 관련국 반응	18
[부록 1] 「평화협정」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일지 (요약)	27
[부록 2] 「평화협정」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전문	91
[참고자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투쟁 (북한문헌 발췌)	267

1. 평화협정의 정의

가. 국제법적 정의

-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전 당사국간에 체결되는 협정
 - 평화조약 또는 강화조약이라고도 하며, 전쟁상태의 종료를 목적으로 한 교전당사국간의 명시적 합의는 명칭에 관계없이 그 국제법상 효력은 동일
 - * 국제법에서 조약(Treaty)이라는 용어는 문서의 형태로 된 모든 종류의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협정(Agreement)은 조약보다는 덜 공식적인 표현으로서 대체로 조약과 같은 의미로 혼용
- 당사국간의 권리·의무, 점령지와 점유물 처리, 전후의 양국 관계, 전후의 체제 등의 규정과 같이 평화 회복후의 당사국간의 법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통례
 - 전후의 새로운 경계 확정, 정치적 관계(주종 또는 협조 관계)형성 등의 바탕이 되며,
 - 새로운 질서 확립의 규제 요소로도 작용

나. 북한측 정의

- 나라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
(『현대조선말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1.12, p.2225)

* 조선말사전의 이전 판에는 없었으나 81년 판부터 「평화협정」 항목을 새롭게 추가

-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들이나 또는 지역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선린관계와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92.3, p.802)

* 동 내용중 「평화조약」에서 표현한 「나라들 사이」를 「나라들이나 또는 지역들사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특이함. (남북간의 특수적 관계를 의식한 사전 개념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됨.)

-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는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
(『백과전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유사용어 정의 >

△ 평화조약: 나라들사이에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평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맺는 조약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92. 3, p.802)

△ 강화조약: 전쟁을 하던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끝맺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맺는 조약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92.3, pp.109-110)

: 교전국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맺어지는 조약을 말함. 강화조약은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영토,

군비, 손해배상, 전쟁범죄자, 전쟁포로,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70.10, p.11)

: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시키고 나라들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승국이 패전국과 맺는 조약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73.12, p.25)

다. 우리측 정의

- 대체적으로 국제법적 정의에 준하여 전쟁을 종료시키는 교전 당사국간의 명시적 합의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임.

< 유사용어 정의 >

△ 평화조약: 교전 당사국이 합의하여 전쟁종료를 위해서 체결하는 조약. 강화조약이라고도 함.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5)

△ 강화조약: 전쟁을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전국간의 조약. 평화조약이라고도 함.

(『정치학 대사전』, 박영사, 1984)

: 교전당사국이 합의하여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평화조약이라고도 함.

: 서로 싸우던 나라끼리 강화할 때 맺는 조약. 평화조약.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2. 북한의 「평화협정」제의 연혁과 대응

가. 남북평화협정 체결제의

- 북한측이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처음으로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은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73. 3.15)로써
 - 당시 북측대표 박성철은 기조연설 내용 중에서 이른바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5개항」의 제5항으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
 -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 * 이전에도 북한측은 제네바 정치회담시 남일 외상 연설('54.6.15)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 연설('62.10.23), 김일성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회견('72.1.10)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바 있음.
- 이후인 1990년대 초에는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4차례 대표접촉('91.11.11-26) 및 제5차 고위급회담('91.12.10-13)에서 북한측은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 우리측의 당사자 자격을 시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미·북한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 * 북한측은 「정전상태의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동의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북한측은 정치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미·북한간 협의·해결할 문제이며, 군정위 기능 정상화 문제도 남북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나. 대미평화협정 체결제의

- 북한측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미 직접회담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74.3.25)로써
 - 당시 허담 외교부장의 보고연설을 통해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의(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 현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 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응당
 -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 쥐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
 -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미합중국에 정식으로 제의
- 이후 북한측은 한국문제가 상정되었던 1974년, 1975년의 유엔 총회와 1976년 8월 비동맹 제5차 정상회의, 1979년 9월 비동맹 제6차 정상회의 등에서
 -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반복 주장
 - * '79. 7.10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우리측의 남북한·미국 「3당국 회의」 제의('79. 7. 1)를 거부하면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들인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 미·북한 회담의 선행을 전제로 회담과정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리고 미국이 요청을 한다면 한국을 「옵저버」로서 참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80.10.10)에서 미국과 조선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제의한 이후
- 우리정부 당국과 미국정부 및 의회에 대해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84.1.10)
 - 미·북한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하며 남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
 - 「조선 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등을 토의하자는 남북한·미국 사이의 「3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제의('86.6.17), 미·북한 국회 대표간 회담 개최 제의('88.7.20) 등을 한 바 있음.
- 1990년대초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 전후 과정(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에서 북한측은 평화협정문제에 대해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미·북한간 협의·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 1993년에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3.12)으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된 이후, 북한은 제네바에서 열

린 제2단계 미·북고위급회담('93. 7.14-7.19)에서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공식 요구

- 북한 핵문제와 미·북관계 개선 문제의 「일괄타결」(Package deal)을 위한 방안 가운데 북한측의 핵투명성 보장(IAEA 임시·일반사찰 수용)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해소(미·북수교, 국가승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를 요구('93.11.12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 금년('94) 4월에는 미국측을 상대로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직접 협상을 제의
 - 정전협정의 유명무실화 및 이에 따른 북·미간 평화협정 대체를 주장하면서, 양국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제의(4.28 외교부 성명)
 - 군사정전위원회의 북한 대표철수 방침 통보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공산측 대표인 체코 대표단 철수('93.4.3)에 이어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 시사(4.28 군정위)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설치(5.24), 군정위 중국군 대표단 철수결정 사실 보도(9. 2)

※ 참고 :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및 「미·북한 평화협정」
제의 내용대비

남 북 평 화 협 정	미·북한 평 화 협 정
<p><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5개항 협의></p> <p>①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p> <p>② 쌍방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p> <p>③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작전 장비·군수물자 반입 중지</p> <p>④ 미군 등 외군철거</p> <p>⑤ 이상 문제해결 및 북과 남사이에 무력 불행사 담보 위한 평화협정 체결</p> <p>('73.3.15 남북조절위 2차 회의)</p>	<p><조미 평화협정에 포함할 내용></p> <p>① 상호 불침범서약, 직접적 무력충돌 위험성 제거</p> <p>② 상호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 무기·작전장비·군수물자 반입·중지</p> <p>③ 주한 외군의 「UN군」모자 제거, 빠른 기간내 무기와 함께 철거</p> <p>④ 「조선」의 외국 군사기지·작전기지화 반대</p> <p>('74. 3.25 최고인민회의 5기 3차 회의)</p> <p>○ 미·북한 회담에서 미군철수 및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문제 토의 - 남한당국자 「옵저버」참가 허용 ('79. 7.10 외교부 대변인 성명)</p> <p>○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미·북한), 불가침 선언 채택(남북한) 문제 토의 ('84. 1.10 대남·대미편지)</p> <p>○ 현 정전기구 중지 및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제의</p> <p>- 대미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 ('94. 4.28 외교부 성명)</p> <p>- 군정위 및 중감위의 일방적 철수 방침 통보('94. 4.28 군정위 비서장 접촉)</p>

다. 우리측의 대응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와 관련

- 우리측은 1973년 남북조절위원회 2차(3.14-16), 3차(6.12-14) 회의시
 - 남북간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 신뢰회복과 북한의 대남폭력혁명 노선의 포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 1974. 1.18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

(2)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서는

- 박정희 대통령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1주년 담화('74.6.23)를 통해
 - 제3자에 대한 평화협정 운운으로 위장 평화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
 -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79.7.1)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남북한 당국이 주역이 되고 미국은 협력자로 참여하는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 회의(3당국회의) 개최를 공동제의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84.1.11)에서 북한측의 「3자회담」 제의(1.10)에 대해

- 「버마」사건에 대한 공식 또는 비공식 사과 및 관계자의 처벌 요구
 - 통일은 우리민족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 당국자간의 직접대화 재개 촉구
 -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관계국 회담도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88.10.18)에서
-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 할 것」을 제의하고
 - 이 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 노태우 대통령의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89.9.11)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제의시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임을 언급
- 노태우 대통령의 제46차 유엔총회 연설('91.9.24)에서는
- 평화통일 실천 3대원칙의 하나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의
 -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

(3)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정치분과위원회 회의시

- 남북고위급회담시 기본합의서 타결과정에서 쌍방은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 문제로 인해 마지막까지 입장대립
 - 우리측은 6.25 전쟁의 실질적인 교전당사자이며 현재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남북한이 당연히 평화체제로의 전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인 미·북한이 평화협정 전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 북측이 「체제」대신 「상태」로 표현을 수정한 우리측 절충안에 동의해 옴으로써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을 제5조로 명시, 합의 도출
 -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 준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 강구, 군사정전협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 실시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또다시 우리측의 당사자 자격을 시비하면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문제는 미·북한간 협의·해결할 문제라고 주장
 - * 쌍방은 「기본합의서」 5조의 내용을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토의 종결
 - *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북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수립 제의

가. 상 황

- 북한측은 외교부 성명('94.4.28)을 통해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북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의
 - 미·북한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이 필요
- 군정위 비서장접촉(4.28)에서 군정위 일방적 철수방침을 유엔사측에 통보
 - 군정위로부터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 기타 참모장교 등 북한측 요원 전원철수 및 군정위 유엔측 불인정 입장을 전달하고
 - 군정위 대체 및 항구적 평화보장체제 수립문제 협의를 위한 미군측과의 판문점 직접 접촉을 제의
 -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측 지역내에 무장병력 초과 투입(판문점에서 철모, 개인화기로 무장한 1개 소대 무력시위)(4.29) 및 휴전선 근접 공군훈련(북한 공군기 15-20대 휴전선 인근지역까지 남하) 실시(4.30)
- 판문점에서 유엔사측 정치담당 장교와 접촉(5.24)을 갖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를 설치하였다며 그 명칭과 인원명단을 통보
 - 기구명칭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KPA PMJ Mission)

- 또한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미·북한 협상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김영남 외교부장의 서한(6.3 보도)을 통해
 - 핵문제는 사실상 유엔이 논할 대상이 아니며 미·북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전구조의 기틀이 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
-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대변인 명의의 담화(6.11)에서는
 - 북측 행동을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군정위 비서장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6.6, 성명)한 유엔사측을 비난
 -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말살해온 책임을 가리우기 위한 연극에 불과
- 이후 북한은 중국의 군정위로부터 대표단 철수 결정(9.2 보도) 및 군정위 중국측 대표의 판문점 북한 대표부 작별 방문(10.27) 사실 보도
 - * 이붕 중국총리는 새로운 평화체제에 돌입하기 전에 남북한과 관계각측이 협정체결을 지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11.4 제주 호텔신라 내외신 기자회견)

나. 북한측 의도

- 이러한 북한측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철수 ⇒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 연방제 통일이라는 기존 대남전략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비롯

- 북한이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 미·북한간 핵문제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미협상을 진행시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
- 특히 북한측이 군정위 기구로부터의 일방적 철수를 발표('94.4.28)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의 재결의가 논의되는 와중에 나온 것으로서
 -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한 협상에서 체제보장 등 여러가지 요구와 핵문제와의 일괄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군정위 철수라는 충격요법을 사용함으로써 핵투명성 문제에 집중되는 관심을 희석시키고 북한측이 제시하는 일괄타결 협상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또한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가 남한의 흡수통일 기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체제유지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자구책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
- 김영남 외교부장이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평화보장체제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 등을 유엔에 제기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은
 - 대미 평화협정 제의 및 정전협정 무효화 행동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 한반도의 긴장원인이 핵문제가 아니라 마치 불안한 휴전협

정체제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여 당면한 핵사찰 압력과 대북 제재를 모면해 보려는 의도로 분석됨.

- 한편 북한측이 1992년이래 군정위 유엔사측 수석대표로 한국 군장성이 임명된 것을 구실로 회의 개최를 거부해온데 이어 군정위 기능 자체를 부정, 정상적 대화채널 중단과 정전체제의 실질적 무실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 앞으로 판문점에서의 군사대화는 북한측은 대표부 자격, 유엔측은 군정위 자격으로 만나는 변칙적 대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

다. 관련국 반응

(1) 한 국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및 현 정전협정 체제 유지라는 확고한 입장 견지

-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한 합의(「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94. 4.29 외무부 당국자 논평)

- 군사정전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정전협정을 대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북한의 행위는

-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 있는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에 위배
-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무용화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
-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

('94. 5. 3 통일원 대변인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정전협정문제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북한과 논의할 사항이 아님.

('94.5.3 이홍구 통일부총리 방송3사 인터뷰)

-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으나, 이는 세계의 눈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것.
-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대남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어려운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

('94. 5. 4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 참석자 초청 다과회시 발언)

- 북한의 평화협정 대체 주장은 핵문제의 초점을 흐려놓으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보겠음.
- 남북당사자간에 직접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갈 것임.

('94. 5.10 이홍구 통일부총리 중앙일보 회견)

- 현 정전협정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남북한이 협의·해결해야 함.

('94. 5.16 송영대 통일원 차관, 통일고문회의 발언)

- 정부는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했음.
 -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반드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 마땅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위에서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94. 5. 26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관련 보도자료)

- 최근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군정위 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동은 장차 유엔사 해체 및 주

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간을 이간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함.

-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의해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북한의 정전협정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의 일부라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임.
- 차후 북한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사전 협조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함.

('94. 5.26 국방부,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합참의장 명의 서한)

-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국 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한데 대하여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함.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임.

('94. 9. 2 외무부 대변인 논평)

-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당사자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며, 현재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음. 중국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94. 9. 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관련 통일원 공보관 브리핑)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수 없게 돼 있음.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으니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

('94. 9.10 이홍구 통일부총리, 국회 ROTC
출신의원 모임 초청 간담회 발언)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진전과 함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임.
- 남북이 당사자원칙아래 평화체제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상호 불가침 조항의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94. 9.14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 의장,
고위당직자회의 발언)

- 남북관계 진전없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므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함.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미·북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과제도 아님.

('94. 9.15 이홍구 통일부총리,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 면담시 발언)

-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94.11. 4 한승주 외무부 장관, 제주
호텔신라 내외신 기자회견)

(2) 미 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우리측 입장 지지

-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가 아니라 미군 대표와 직접 관계를 갖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음. 우리에게 관한 한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함. 휴전협정과 북한 핵문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북한측 요구는 군사정전위 회의에 더이상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해산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94. 4.28 웰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

- 정전(협정)이 무용하고 무효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92. 2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간 대화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우리는 이 같은 접근방식을 강력히 지지함.

('94. 5. 2 웰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

- 군정위가 한반도 평화실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대표단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소환하는 것이지 철수하는 것은 아님.

('94. 9. 2 미 국무부)

- 한·미 양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기존 합의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될 사안이며 미·북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현 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음.

('94. 9. 7 한·미 외무장관 회담결과 발표)

(3) 중 국

군정위 자국 대표단 소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입장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지지

- 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북한측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기도는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평가

* 북한측은 4.28 외교부 성명발표 수시간 전에 중국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사전 협의는 없었다 함.

('94. 5. 9 Wang Yi 아주국 부국장)

- 당가선 중국외교부 부부장은 송호경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와의 회담에서 군정위 철수 결정을 통보했음.
- 양측은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의 현 상황에 맞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

('94. 9. 1 신화통신 보도)

-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관련조항들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측도 이 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음.

('94. 9. 2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평화 안정과 주변국 및 이웃의 안정과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새로운 체제에 돌입하기 전에 남북한과 관계각측이 협정체결을 지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계각측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간의 대화를 지지함. 우리는 이를 위해 남북간에 다단계별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94.11. 4 이봉 총리, 제주 호텔신라 내외신 기자회견)

(4) 기 타 (유엔사측)

현 정전협정체제 고수입장을 확고히 견지

- 북측이 취한 일방적인 군정위 기능 중지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 정전협정의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쌍방 사령관의 합의가 필요함. 유엔사측은 앞으로도 군정위와 중감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임.

('94. 5. 6 비서장 칠튼대령, 북한군 대좌 김연기
와의 비공식 접촉시 유엔사측 입장 전달)

- '94. 4.28 군정위 및 중감위와 관련하여 당신측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에 대하여 수락할 수 없음.
- 「정전협정」 제61항에는 「정전협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쌍방 사령관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귀측 조치에 동의한 적이 없음.

('94. 6. 6 군정위 유엔사측 비서장 칠튼대령, 북측
불참 군정위 회의실에서 발언문 낭독)

- 정전협정은 체결 당사자인 유엔사, 중국, 북한 3자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음. 중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체제는 유효함.

('94. 9. 2 유엔사측 비서장 슈메이커 대령, 북한측
박임수 대좌 접촉시 유엔사측 입장 전달)

[부록 1]

「평화협정」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일지(요약)

□ 1954. 6.15 북한 남일 외상, 「제네바 정치회의」 최종회의 제1차 연설

-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정부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라는 방안 5개항 중 제3항)

□ 1955. 8.14 김일성, 8.15 해방 10주년 기념대회 연설

-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야 함.
-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아세아 국가들이 광범히 참가하는 극동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도를 강구할 것을 유관국가 정부들에 희망함.
- 남북조선 당국이 남북간에 현존하는 불신임과 긴장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앞에 선포하며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비생산노력을 평화적 건설에 돌리기 위하여 남북조선 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할 것을 제의함.

□ 1956. 4.28 북한 노동당 제3차 대회 결정서

-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투쟁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조선에서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할 것임.

□ 1957. 9.20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 연설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 정전협정의 오늘 조항들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켜야 함.
-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퇴시켜야 하며 남조선이 미국의 원자 기지로 전변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함. 남북간에 군비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축소하여야 함. 우리는 남북조선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을 남조선당국에 재차 제의함.
- 우리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남북조선의 대표를 참가시키는 유관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함.

□ 1962. 6.2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회의 채택 대남편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조선정권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함.
- 남북 조선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축소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민족의 장래문제에 대한 이해를 접근시키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혹은 서울에서 협상할 것을 제의함.
- 우리 민족 내부 문제들을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조선사람끼리 남북조선당국자들간에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함.

□ 1962.10.23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 연설

-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임.
-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군대의 축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 것임.

□ 1963. 7.26 제175차 군사정전위 본회의 북측대표 발언

- 조선정전협정의 엄격한 이행과 조선정전의 공고한 평화로의 전환, 그리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신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함.
 - ①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우리측에 대한 일체 도발행위 및 적대행위와 정전협정 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위법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 ② 정전협정의 규정들을 위반하고 증원하는 작전물자들을 계속 반입하면서 남조선에서 당신측이 추진시키고 있는 새 전쟁도발 책동과 군사소동을 중지할 것
 - ③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측에 대한 각종 적대행위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조선정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

- ④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조선정전협정의 정신 특히 협정의 서언 및 제60항의 정신에 비추어 남조선에 이 이상 머물러 있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미군은 비법 반입한 신형무기를 비롯한 일체의 작전 물자들을 걷어 가지고 즉시 철거할 것

□ 1963.11.22 북한정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조선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함.
- 이러한 조치는 남조선 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간의 불신과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임.

□ 1963.12.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 「조국전선」 중앙위 · 조국평화통일위 공동연석회의, 남조선 인민 · 정계 인사 및 사회활동가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혹은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금 제의함.
- 남북조선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군비를 축소한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 인민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남북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게 될 것임.

□ 1965. 1. 8 김일성, 재미교포 김용중 조선문제연구소장에게
답신

- 조선의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는 당신의 제의는 정당한 것임.
- 남조선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의 무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거대한 일보전진으로 될 것임

□ 1965. 6.23 「6.25」15주년 북한정부 비망록

- 남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남북 호상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함.

□ 1966. 7.21 제21차 유엔총회 관련 북한정부 비망록

-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를 비롯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제의함.

□ 1969. 9. 2 김일성, 핀란드 민주청년동맹 대표단 질문에 대답

- 미제침략군이 조선에서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임.

- 미제침략군이 조선에서 물러가고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대폭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조선에서 전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며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길임.

□ 1969.10. 8 제24차 UN총회에 제출한 북한정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한 다음 남북조선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 유관 국가들의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

□ 1970. 6. 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재미교포 고병철 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 위원장에게 회답편지

- 오늘이라도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물러가면 조선에서 평화는 확고히 보장될 것임. 이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먼저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 것을 제기하고 있음.
- 군대축소의 조치가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며 특히는 남북간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임.

□ 1970. 6.22 북한정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간에 상대방을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

□ 1970. 9.16 제25차 UN총회 관련 북한정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남북조선간에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병력을 크게 줄이며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울 것을 언제나 주장하고 있음.

□ 1972. 1.10 김일성,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기자 「다가끼 다께오」와 회견

-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 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함.
-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음. 만약 남조선 위정자들에게 「북진통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임. 그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있지도 않는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여야 할 것임.

□ 1972. 5.26 김일성, 미국 「뉴욕타임즈」기자 「솔즈베리」등
과 회견

- 우리는 남북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줄이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 1972. 6.21 김일성, 미국 「워싱턴 포스트」 동경지국장 「해리슨」과 회견

-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남북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나가야 함.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있을 구실이 없게 됨.
-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는 조건에서 남북이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인다면 우리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담보가 더 튼튼히 마련될 것임.
- 이런 문제들은 남북조선 당국자들 사이의 회합이나 혹은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남조선 국회의원들 사이의 회합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임.

□ 1973. 3.15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박성철 북측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제안을 협의할 것을 본 회의에 제기함.

-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 ②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 ③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④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 것 ⑤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음에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 o 어제까지 서로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20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으며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까지 한 조건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음.

□ 1973. 3.15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이후락 우리측 공동위원장 발언

- o 귀측에서 제의하는 평화협정이나 또는 군비축소, 이것 모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임.
- o 우리가 군비축소문제나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진정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그러한 행위부터 먼저 중지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속에 말로만 평화협정 말로만 군비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더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임.
- o 나는 귀측의 긴 여러가지 애국 충정에 넘친 제안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나 추진하는 절차, 순서, 방법 또 가장 내가 중요시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는 바탕위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또 그러한 순서를 다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의한 경제와 사회문제부터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제의함.

□ 1973. 4. 5 북한 김일 정무원 총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 회의 보고

-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우리의 5개 항목 제안에 합의하고 하루빨리 해당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우리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새로이 천명함.

□ 1973. 4. 6 북한 최고인민회의, 각국 국회와 정부들에 보내는 편지

-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줄일 용의가 있음.
-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우리의 5개 항목 제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73. 4. 6 북한 최고인민회의, 미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 우리는 쌍방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풀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 등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 항목 제안을 내놓았음.
-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지하고 무기와 군사장비의 공급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군비확장과 전쟁연습을 그만

두며 남조선당국자들을 무력으로 지원하여 조선사람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함.

- 최고인민회의는 미국국회가 우리의 편지에 신중한 관심을 돌리고 해당한 긍정적 대책을 강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미군이 나가면 20만이하로 자진해서 줄이겠다는 내용은 언급 회피

□ 1973. 4.10 제338차 군사정전위 본회의 북측대표 발언

- 우리는 이번에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그리고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제기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우리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을 새로이 천명하였음.
- 우리측은 다시한번 당신측에 요구하는 바, 당신측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면 우리측이 오늘 회의에서 제기한 정당한 요구를 심중히 연구하고 그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1973. 4.16 김일성, 캄보디아 국가원수 「노르돔·시아누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 제일 중요한 것은 당면하여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개 항목 제안을 하루빨리 실현

하며 또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의 각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을 실현하는 것임.

□ 1973. 6.12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박성철 북측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 지난 2차 회의에서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5개 항목의 제안을 제시하였음.
- 나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측의 5개 항목 제안도 쌍방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협의 하자는 것을 제의함.

□ 1973. 6.13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이후락 우리측 공동위원장 기조발언

- 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동감함. 그러나 간단한 합의마저도 지킬 수 없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기상조임.
-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조그만한 사항마저도 실천이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우리 국민을 설득시키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임.

□ 1973. 6.23 박정희 대통령,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함.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함.

- (2) 한반도의 평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하지 않아야 함.
 - (3)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계속 노력함.
 - (4)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음.
 - (5)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남북한이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6) 호혜평등 원칙하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며 이념·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대한민국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함.
 - (7) 평화선린의 대외정책과 우방국과의 기존 유대관계 공고화를 재천명함.
- 상기 정책중 대북관계 사항은 통일시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됨.

□ 1973. 6.23 김일성, 체코당 및 정부 대표단장 「후사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함.
- ①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함.

-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 당국에 제기

②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해야 함.

③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

④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임.

-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연방공화국

⑤ 분열이 고착되어 우리나라가 두개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함.

-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유엔에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

□ 1973.11.15 김용식 외무부장관, 제2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는 소위 평화협정이 남북한 UN동시가입안을 반대하는 북한측 입장과 모순됨. 조국의 영구 분열을 막기 위하여 단일국가로 UN에 가입하자는 그들의 제안과도 양립될 수 없는 것임.
- 북한이 이처럼 자가당착적인 제안을 내세우는 궁극적 목적은 한국에서 UN군을 철수시키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그들의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 이것은 북한측이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음.
- UN군 사령부는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협정 준수를 보장하는 의무의 일환으로서 휴전협정 체결이래 도합 344차에 걸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가진 바 있음. UN군 사령부는 이 지역에서의 전쟁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왔으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여 왔음. UN군 사령부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주요 일방 당사자를 제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휴전협정의 사실상의 무효화를 뜻하는 것임.
- 우리는 UN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하는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음. 그러나 UN군의 철수는 한국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1974. 1.18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님.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음.

-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의함.
- 「불가침협정」의 골자는 ①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 ②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 ③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 세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예방되고 평화는 유지됨.

□ 1974. 2. 7 북한 이용무 총정치국장, 인민군 창건 26돌 기념 대회 보고

- 남조선의 불가침 조약 제의는 평화협정 체결을 기피하며 조선에서 전쟁발발의 실제적 근원을 호도하게 하고 침략과 전쟁준비 책동을 가리워 보려는 술책임.

□ 1974. 3. 4 김일성, 알제리 「부메디엔」총리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불가침 조약」같은 것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함.

□ 1974. 3.25 북한 허담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 보고

-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 과정은 남조선에 미국 군대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음.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 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당함.
- 미국과의 평화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①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
 - ②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 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 ③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
 - ④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
-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토의를 미국측에 정식으로 제의함.

※ 대미 평화협정 체결 처음 제기

□ 1974. 3.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 3.25 허담 최고인민회의 보고서 대미 평화협정 내용 4개
항 제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함.
- 회담은 지금 판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보다 한급 높은 대표들로 구성하며 회담장소로서는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1974. 6.22 북한 정준기 정무원 부총리, 김일성 연설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보고

-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정책과 두개조선 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남조선에서 모든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즉시 물러가야 하며 조선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평화협정 제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함.

□ 1974. 6.23 박정희 대통령,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주
년 담화

- 북한측은 공공연히 우리 사회 내부 혼란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함으로써 적화통일의 야욕을 노골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위장평화 선전을 일삼고 있음.
- 이는 한마디로 그들이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임.

□ 1974. 8.15 박정희 대통령, 제29년 광복절 경축사

-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함. ②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함.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③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전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함.
-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임.

□ 1974. 9. 8 북한 박성철 부총리, 정권수립 26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

-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지체없이 받아 들이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함.

□ 1974.10. 1 김일성, 시리아 대통령 「하페즈,알·아싸드」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 만일 외국군대 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처리될 수 있을 것임.

□ 1974.10. 7 북한정부 비망록

-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

주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함.

- 미국과 이러한 내용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분제를 대화를 통하여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자는 것임.

□ 1974.11. 8 북한 허담 외교부장, 제63차 「조국전선」중앙위 확대회의 보고

- 북과 남의 정치협상회의 또는 대민족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시킬 방도와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정책을 강구해야 함.
- 이 회의에서는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다음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의 군사당국자들의 쌍무적 군사회담을 열고 현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해당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 강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1974.11. 8 북한 제63차 「조국전선」중앙위 확대회의 성명

-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당국자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제의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함.
-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한 다음 우리나라에서 정전을 견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북과 남의 군사당국자들의 쌍무적 군사회담을 열고 현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

군사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해당한 실천적 대책들을 협의 강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1974.11.25 북한 이종목 외교부 부부장, 제29차 UN총회 제1정치위원회 연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종식되고 조선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임.
- 쌍무적 군사회담에서 다음 문제들을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남북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담보문제
 -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국대가 철거한 후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무장 충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쌍방이 조선정전협정의 중요 조항들을 이행할데 대한 의무를 지는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 현존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
 -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경쟁과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
-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외에 그 어떤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북과 남사이에 평

화협정이 맺어질때까지 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존속시킬 수도 있을 것임.

□ 1974.11.29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2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 우리는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할 것을 본 위원회앞에 남북한이 함께 굳게 맹서할 것과 박대통령이 제의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수락할 것을 북한대표들에게 촉구하는 바임.
- 선후책없이 국련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소멸됨으로, 휴전체제가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1975. 1.14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 이북에서는 우리가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제의를 하기 전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북평화협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여러번 정치 선전용으로 써먹었음. 평화협정 운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임.
- 나는 다시 한번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몇가지 제의하고자 함.
① 공연히 쓸데 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것,
② 「6.23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UN에 남북이 같이 가입을 하자는 것(UN 동시가입 싫으면 한국 단독가입의 반대·방해 중지 요구), ③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를 한다면 UN군사령부 해체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 1975. 5.28 김일성, 알제리 정부기관지와 회견

-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북과 남이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남조선측에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 것을 미국당국에 제의하였음.
-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통일제안들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리하여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 3년이 되었으나 아직 통일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음.

□ 1975. 6.29 박정희 대통령, 일본 재팬타임(JAPAN TIME)지 기자회견

-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극히 불안정하나마 겨우 전쟁재발을 방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나마도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임.
- 따라서 UN군사령부의 해체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현재 휴전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만일, 그와 같은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주한 UN군사령부의 해체를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임.
-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둘 것은 UN군사령부의 해체여부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한국주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두개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임.

□ 1975. 8.11 제30차 유엔총회 공산측 결의안 상정 관련 북한 정부 성명

- 원래 정전협정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협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써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거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는 것임.
-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야망이 없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는데 참말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 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의에 응해 나서야 할 것임.
- 미국측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에 자기측 서명자를 유엔군사령관 대신에 미군과 남조선 괴뢰 장교로 교체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침략적 요구임.
- 조선정전협정의 제약 일방인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정전협정 자체도 그 존재를 끝마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정전협정을 다른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면 몰라도 그 서명자를 바꾼다는 문제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음.

□ 1975. 8.17 제30차 유엔총회에 2개의 상반된 결의안 제출관련 북한 외교부 비망록

-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며 외세의 간섭이 제거된 다음 남북조선 사이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군대를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며,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이 참으로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데 관심이 있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평화협정을 거절하고 정전상태를 무한정 고착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

□ 1975. 9.11 김일성, 불란서 공산당기관지 「라뉴벨 크리띠끄」 대표단 질문에 답변

-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함께 유엔의 깃발밑에 남조선에 와 있는 미군을 모두 철거시켜야 함.
- 우리는 남조선에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 조선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미국당국에 제의하였으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 남북의 무력을 대폭 줄이며 군비경쟁과 무력증강, 외국으로부터의 무기와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음.
- 우리 당이 내놓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조선에서 전쟁과 긴장상태의 온갖 근원이 없어지고 평화통일의 튼튼한 안보가 마련될 것임.

□ 1975.10. 9 김일성,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보고

- 남조선에 있는 「UN군」이라는 것은 곧 미군이며 따라서 「UN군사령부」해체문제, 미군철거 문제는 절대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임.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UN군사령부」만 해체하는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에 실제적 큰 의의가 없음.
-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조선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님.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

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 것을 주장함.

-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 1975.10.21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 우리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제의코자 함.
 - ① 현행 휴전협정을 보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휴전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기초임.
 - ② 우리 정부는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임. 본인이 금년 6월 27일 언명한 바 있거니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서라도 타방 당사자들과 회동할 용의가 되어 있음.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유엔군의 철수가 1976년 1월 1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말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함.
 - ③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을 대치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기타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되어 있음.

□ 1975.10.27 북한 이종묵 외교부 부부장, 제30차 유엔총회 제1
위원회 연설

-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남조선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음.
-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에서는 도대체 남조선을 배제한다느니 배제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문제가 설 수 없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에 직접 조인하였으며 그 수행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사이에서만 해결할 수 있음.
-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남조선에 철거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임.

□ 1975.11.13 박정희 대통령, 일본 마이니찌(毎日) 신문 기자회견

- 지난번 UN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휴전당사국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우리의 우방국들에 의해 제출되었음. 물론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중공도 찬성하지 않았음.
- 나는 이 기회에 북한이 휴전당사국회의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면, 휴전당사국회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이 휴전당사국회의의 개최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함.

□ 1976. 2.29 북한 허정숙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장, 3.1절
57돌 기념 보고회 보고

- 미국이 조선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함.

□ 1976. 3.28 김일성,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국장과 담화

- 우리나라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지 그 어떤 다른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음.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당국이 풀어야 함.
- 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 것을 들고 나왔음. 「불가침조약」이란 북과 남이 두개 나라로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분열을 합법화하자는 것임.

□ 1976. 5.13 박동진 외무부장관 성명

- 북한당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소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한국문제를 한민족 스스로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대한 정면 거부임을 북한이나 제3국은 똑바로 인식하여야 됨.
- 북한 당국자들이 대안없는 「UN」 군사령부 해체나 대미 평화

협정 체결같은 실현 불가능한 획책이나 기만적인 국제선전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눈을 안으로 돌려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는 대화의 광장에 하루속히 되돌아 오는 동시에 남북회담 재개와 휴전협정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이미 아축이 제의한 관계 당사자 회의 등에 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의 반성을 재삼 촉구함.

□ 1976. 5.29 김일성, 유고 「탄유그」통신 대외편집 주필과 회견

-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대로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임.

□ 1976. 6.22 북한 정준기 정무원 부총리, 「평화통일 5대 방침」 발표 3주년 평양시 보고회 보고

-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UN총회 결정대로 남조선에서 자기의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야 함.

□ 1976. 8.17 북한 박성철 정무원 총리, 제5차 불력불가담 국가 수뇌자회의 연설

- 남조선 당국은 본래 정전협정조인 일방도 아니고 조선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실권도 가지고 있지 못함.
-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임. 따라서 참가했잖아 할 일이 없는 남조선 당국자

들을 「당사자들의 회담」에 끼어넣자는 것은 전혀 부당한 것임.

- 미제는 우리와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회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1976. 8.20 제5차 블럭블가담 국가 수뇌회의 결의문

-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전쟁도발 책동이 당장 중지되고 남조선에 반입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수단들이 제외되어야 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외국군사기지들이 철폐되어야 하며 조선군사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1976.10. 9 제382차 군사정전위 본회의 북측대표 발언

-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주장

□ 1977. 1. 1 김일성 신년사

-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응해 나서도록 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함.

□ 1977. 2. 7 북한 김익현 인민군 부총참모장(중장), 2. 8 인민군창건 28돌 기념 중앙보고회 보고

- 미국은 현 군사정전협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

국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시급히
응해 나서야 할 것임.

□ 1977. 6.20 김일성, 불란서 「르몽드」주필과 회견

- 우리는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을 오래
전에 제의하였음.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을 아직도 이에 대
하여 대답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전환 여하에 달려있음.
- 우리는 카터행정부가 선거공약대로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소하고 적
대시정책을 개변한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1977. 6.24 북한 15개 사회단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미국이 진실로 조선의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의에 응해나와야 함.
-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협상을
통하여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끼
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마련될 것임.

□ 1977. 7. 3 「7.4 성명」 발표 5돌 평양시 보고회 양형섭 보고

-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지난날의 그릇된 침략정책을
되풀이 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

수단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를, 단계적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루빨리 철수하여야 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함.

□ 1977. 9. 8 북한 박성철 정무원 총리, 9.9절 29돌 기념보고대회 보고

- 미제국주의자들은 두개조선 정책을 포기하고 UN의 결의대로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철거시켜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야 함.

□ 1977.12.23 박정희 대통령, 일본 「후지」(富士) TV 특별회견

-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넌센스」임. 남북간에 분단된 민족이 우선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데 대해서 같은 민족인 우리와는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우리는 따돌려 놓고 태평양 건너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이며, 또 그건 실현성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한국을 따돌려 놓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베트남」전쟁때 「하노이」가 「사이공」정부를 따돌려 놓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해서 결국은 월남전체를 공산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여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 선행조건임.
-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 합의사

항을 보장케 하고 또 이것을 준수하게끔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국제적 보장이라면 실효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북간의 어떤 기본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없는 국제적 보장이란 것은 실효가 없을 것임.

- 얼마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의 합의하에 공산측에 제안한 제의가 있는데 그것은 휴전 당사자 4자회담을 열자는 것이었음. 휴전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측에서 한국과 미국, 공산측에서 북한과 중공, 4자가 모여 앉아서 남북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것임.
- 물론 이것은 공산측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런 회담이 설령 개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노리는 문제는 우선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몇가지 합의를 우리가 서로 모색해 보자는 것임.

□ 1979. 7. 1 한미 공동성명

-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촉진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 결정하였음.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양국 대통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및 미국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외상에게 이 뜻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음.

□ 1979. 7.1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 조선문제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3당국 회의라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혼탕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 다만 우리와 미국사이에 우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들의 참가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옵저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임.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측(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3당국회의 제의에 대한 반응

□ 1979. 7.22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 조선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는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회담을 여는 것이 중요함.
- 조선과 아세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길도, 미국이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음.

□ 1979. 9. 6 북한 이종욱 정무원 총리, 제6차 블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에서 연설

-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

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
조선에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조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참가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

- 미국이 조선문제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와의 회담에 응해 나와야 함.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
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 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
임.
- 미국측이 정 원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
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읍저버로 참가시키
는 것을 허용할 것임.

□ 1979. 9. 8 북한 박성철, 9.9절 31돌 기념 보고회 보고

-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
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것임.
-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풀어야 할 민족내부 문제에
미국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것이며, 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과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남조
선을 참가시킬 필요가 없는 것임.

□ 1980. 9.28 김일성, 일본 「아사이」(朝日)신문 기자단과 회견

- 만일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는 북과 남의
군대를 서로 축소하고 통일문제를 조선내부의 문제로서 평화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만일 미국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또한 남북연방제가 실시된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맺은 우호협조조약은 필요 없게 됨. 물론 남측은 일본·미국과 맺은 조약을 해소하고 우리도 중·소와의 조약을 해소하여야 함.
-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일 남측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남조선을 읍저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이것은 전에도 말한 문제임. 우리의 제의에 대해 미국의 반응이 전혀 없음.

□ 1980.10.10 김일성, 노동당 제6차 대회연설

-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음.
-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한번 제의함.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임.

□ 1981.10.10 북한 정준기 정무원 부총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1돌기념 보고대회 보고

-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함.
-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여 하루빨리 조·미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함.

□ 1981.12.18 김일성, 유고 「탄유그」통신 대표단 회견

- 미국당국자들이 조금이라도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시켜야 함.

□ 1983. 3.21 북한-니카라과 공동 커뮤니케

- 미국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강점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데 응해야 하며 「두개조선」 조작책동과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그만두어야 함.

□ 1984. 1.10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
합회의,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

-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함.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기함.
-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
-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임.

※ 정무원 총리 명의의 우리측 국무총리앞 편지에 동봉

□ 1984. 1.10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상·하양원)에 보내는 편지

-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봄.
-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견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1984. 1.11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전 인류가 분노한 「버마」 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를 시인·사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임.
-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함.
- 오늘날의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책임있는 남북한 당국 각료급회담이라도 열어야 할 것임.

- 우리는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1984. 1.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 허담보고

- 원래 3자회담은 우리가 조미회담을 제기한 후인 1976년 8월에 당시의 미국무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것임.
- 우리는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수만리 떨어진 미국이 조선땅에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의 종식과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협정체결 제의에 응해 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함.
-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야 함.

□ 1984. 2.10 진의중 국무총리 대북서한

- 귀측 당국이 「버마」사건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른바 3자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음.
-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1984. 3. 7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대한민국 진의중 국무총리에게 편지

-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남북의 군대를 대폭 축소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함.
-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미국으로부터 「국군」에 대한 통수권도 넘겨받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선언을 채택할 전권을 넘겨받는다면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쌍방회담을 고려할 용의가 있음.

□ 1985. 1. 1 김일성 신년사

-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을 실현하여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야 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여야 함.

□ 1985. 6. 9 김일성,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국장과 회견

-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 당사자임. 그러므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없음.

- 중국은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자기의 지원군을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철수하였기 때문에 조선문제의 당사자로 되지 않음.
- 남조선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는 것만큼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였음.
- 3자회담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게 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문제 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임.

□ 1986. 1. 1 김일성 신년사

- 평화적 통일실현에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공화국과 미국·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이 실현되어야 함.
 -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북남간 불가침선언 채택

□ 1986. 6.17 북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및 남조선 주둔연합국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남조선주둔 연합국군 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 회담의제: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

-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의 중지 문제
- 병력과 군비의 축소문제
-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

□ 1988. 7.2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미국국회(상·하원)에 보내는 편지

- 우리는 조선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의 책임있는 우리와 미국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미합중국 국회대표들 사이에 회담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함.
- 조·미 국회대표들 사이에 회담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미 당국자들 사이에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하나의 효과적인 방도로 될 수 있음.
- 조·미 국회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쌍방 국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조·미 국회회담이 열리고 여기에는 상정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협의·해결되면 쌍방 당국자들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워주게 될 것이며 우리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게 될 것임.

□ 1988.10.18 노태우 대통령,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함.

-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함.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임.

□ 1988.11. 7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 단계적인 미군무력 철수와 남북무력 감축문제 협의·해결을 위한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함.
 - 3자회담에서는 검증문제, 중감위권능확대 문제 토의를 위해 중감위 성원국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
 - 미군무력철수와 남북무력감축의 합의에 기초, 이를 미·북한간의 평화협정과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고착

□ 1990. 5.24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 남북군축, 주한미군 철수(단계적 철수 포함)
- ※ 조국통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5가지 과제(① 긴장완화·통일위한 평화적 환경마련 ② 자유왕래·전면 개방 ③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마련 ④ 평화통일 위한 남북대화 발전 ⑤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중에 포함.

□ 1990. 8.15 노태우 대통령, 제45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간의 군사대결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상호신뢰에 바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나는 남북간의 무력사용 포기선언과 불가침협정의 체결, 현 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함.

□ 1990. 9. 5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강영훈 총리 기조연설

-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중 제8항)
- 남북간에 군비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평화보장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1990. 9. 5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

-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대결관계와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북남, 조미 관계를 새로운 기초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1991. 1. 1 김일성 신년사

- 조선반도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은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해야 할 것임.

□ 1991. 6. 1 김일성, 일본 「교토통신」사장과 회견

- 조·미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체결 문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함.

□ 1991. 9.24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연설

-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함.
 - ①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
 - ②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함.
 - ③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함.

□ 1991. 9.26 김일성, 일본 「이와나미」서점 사장 질문에 대답

- 최근에 조미 외교관접촉이 이루어지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두나라가 서로 의사를 전달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봄.

- 우리는 이미 시작된 조미 외교관접촉이 평화협정문제를 비롯하여 조미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함.

□ 1991.10. 2 북한 연형묵 정무원 총리, 제46차 유엔총회 연설

-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이 각각 유엔에 들어간 조건에서 이제 남조선에 와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을 철수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간주함.

□ 1991.12.11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 기조연설

-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근 40년간 지속해온 불안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남북간의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함.
-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하는 문제는 반드시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남북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
- 불안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일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임.

□ 1991.12.11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

-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법

적 견지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북남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법적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함.

-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북남사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우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귀측과 합의 해결할 성격의 문제도 아님.
- 우리나라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와 귀측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에 직접 책임이 있는 미국과의 관계문제가 응당 고려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계약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귀측이 지금도 미국의 군사적 피보호자로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귀측이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한 귀측과의 평화협정이란 성립될 수도 없고 성립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협정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음.

□ 1992. 7. 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북측 백남준 위원장 기본발언

-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은 북남합의서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과 유엔결의에 대한 난폭한 유린임.
- 조선정전협정 제5조 제61항과 제62항에는 협정의 수정, 보충은 물론 다른 협정으로의 교체와 관련한 당사자는 정전협정 계약 쌍방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제하고 있음.
- 귀측은 정전협정 계약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이행의 책임있는 실제적 당사자로도 될 수 없음. 귀측은 정전협정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58년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정식 무효화하기까지 하였음.

- 정전협정 체결당사자도 아닌 귀측이 「당사자해결원칙」을 내세워 그 무슨 「정전협정체제유지」니,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정상화」니 하는 것은 응당 철회되어야 할 것임.

□ 1992. 7. 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우리측 이동복 위원장 토의 발언

-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는 문제는 6.25 전쟁의 뒤처리임
6.25 전쟁은 남북간에 일어났던 전쟁이고 당사자가 남북 쌍방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쳐들어 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지 어느 한쪽이 미국을 쳐들어간 전쟁이 아님.
- 전쟁이 일어난 뒤에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만들었고, 참전 16개국 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음. 싸움을 대신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지휘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만들어졌음.
-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비단 미군뿐만이 아니라 참전 16개국 군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해서 여러나라의 군대를 총괄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이며,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협정이 아니고 야전군 최고사령관간에 맺어진 전지협정임.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문제는 전쟁문제가 그랬던거나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남북간 쌍방임.

□ 1992. 8.28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우리측 이동복 위원장 기조발언

- 귀측은 한반도의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부속합의서에 담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6.25 전쟁은 귀측이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 아님.
6.25 전쟁은 분단된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임. 따라서 이 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이고 그 당사자는 남북 쌍방인 것임.
- 귀측은 유엔군사령관이 미군 장성이었고 1953년의 휴전협정이 미군 장성에 의해 서명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군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 할지라도 유엔군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 아님.
- 미군 장성인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만 미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님.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에는 한국군 뿐 아니라 그 밖의 참전 15개국 군대중 다른 어느나라 군대도 별도로 서명하지 않았던 것임. 더군다나 휴전협정은 현지 최고 야전 지휘관간에 체결된 전지협정이 아닌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이 아닌 것임.

□ 1992. 8.28 남북정치분과위 제7차 회의 북측 백남준 위원장 기
본발언

- 귀측은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로부터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함.
- 우리가 북남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고 하여 평화협정 당사자가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임.

- 귀측이 굳이 정전협정체약당사자의 계승자로 될 의사가 있다면 조미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정에 대한 필요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임.
-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며 정전협정이 수정 보충되지도 않았고 군사통수권을 틀어쥔 미군이 아직 남조선에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귀측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당사자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임.

□ 1993. 7.14 미·북한 제2단계 회담시(제네바) 북측대표 강석주
기조발언

-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교전상태란 무력사용이나 무력사용의 위협을 배제하지 않음.
미국은 현행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지난 6월 13일 갈루치차관보가 남한의 일간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성국가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으로서 교전상태의 종식을 결정하지 못하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임.

□ 1993.10. 5 북한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 제48차 UN총회 연설

-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북남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유엔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선차적이고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서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함.
- 지금이야말로 유엔이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 3390-B대로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인정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정전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협상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93.12.24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갈리」UN사무총장 방북 시 환영 연회 연설

- 현시기 유엔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선문제에서 지닌 책임으로 보나 국제사회앞에 지닌 의무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
-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으로 된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유엔이 우리와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것으로 됨.

□ 1994. 4.28 북한 외교부 성명

-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중이장으로 되었음.

-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하였음.

□ 1994. 4.28 군정위 북측 비서장, 군정위 문제에 대한 북한측 입장 통보

- 북한측은 군정위로부터 위원, 비서장, 부비서장, 기타 참모장교를 소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련측 군정위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
- 북한측은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킬 것임.
- 현안 군정위문제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북한측 최고사령관의 위임을 받은 인원이 미군과 판문점에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 북한측은 또한 다음 사항을 구두설명

- ① 정전체제의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기간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현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
- ②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현상태로 평화를 유지하고, 판문점 직통선(군정위 공동일직장교간 직통전화)을 유지

□ 1994. 4.29 외무부 당국자 논평 - 북한의 한반도 「평화보장 체계수립」을 위한 대미 협상제의 관련

- 북한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함.
-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수립」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풀어 나가야 할 것임.

□ 1994. 4.30 북한 외교부 비망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 적대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전형적 유산인 정전협정체제를 종결짓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긴요함.
- 정전상태를 끝내는 데는 몇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음. 보편적인 관례들 중의 하나는 교전당사자가 교전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임.
- 미국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위해 정전상태를 종결하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계속 응답을 해 오지 않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의 일방 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임.

□ 1994. 5. 3 통일원 대변인 성명 -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 최근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정전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행위는 쌍

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 있는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

-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무용화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음.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되는 것임.
-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실질당사자인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할 때 해결 가능한 것이며 이는 남북간의 엄숙한 합의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

□ 1994. 5. 3 이홍구 통일부총리 방송 3사 인터뷰

-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따라 정전협정문제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북한과 논의할 사항이 아님. 북한의 행동은 현재의 휴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행동임.

□ 1994. 5. 4 김영삼 대통령,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 합동회의 참석자 초청 다과회에서 발언

-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여러 방법을 쓰고 있으나, 이는 세계의 눈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것임.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서방의 인내를 시험한다면, 북

한은 반드시 자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임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경고함.

-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겠다고 대남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어려운 내부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 이제 우리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북한 핵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저지돼야 함.

□ 1994. 5. 6 북한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기자 질문에 대답

-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조·미 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에 따라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문제도 완전히 풀릴 수 있게 될 것임.

□ 1994. 5.10 이홍구 통일부총리, 중앙일보 회견

- 북한의 평화협정 대체 주장은 핵문제의 초점을 흐려 놓으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북한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보겠음.
- 남북당사자간에 직접 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갈 것임.

□ 1994. 5.16 송영대 통일원 차관, 통일고문회의 발언

- 현 정전협정은 평화체제 전환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남북한이 협의·해결해야 함.

□ 1994. 5.24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체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개설(중방보도)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내왔으며 중장 리찬복을 대표로, 대좌 박림수를 부대표로, 상좌 유영철을 책임연락군관으로, 중좌 신군성을 연락군관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미군측에 통지했음.

□ 1994. 5.26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핵문제와 미북수교·평화협정체결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현재 여러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
- 그러나 정부는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했음.
 - 첫째로 정전협정의 대체문제는 반드시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 둘째는 마땅히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위에서 남북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음.

□ 1994. 6. 3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쓸모없게 된 낡은 정전체제 대신에 새로운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측에 제기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동시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측 인원들을 전부 소환하고 미군측과 진행할 새로운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내오고 대표를 비롯한 해당 성원들을 임명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였음.
- 나는 유엔이 자기성원국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불미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자기의 결의를 이행하는 의미에서나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간주함.
- 유엔은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다그치기 위하여 낡은 정전구조의 기틀로 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1994. 6.10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근본문제를 다루는 시금석으로 됨.
- 미국측은 자기측에 의하여 다 죽은 송장과 같은 정전기구를 되살리려 하기 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임.

□ 1994. 9. 2 군사정전위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와 관련한 북한방송 보도(평양)

- (방송) 정부 특사인 송호경 부부장은 1994년 8월 30일 (북경) 회의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중국 외교부 당가선 부부장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음.
-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 정전협정의 체결 일방으로써 지난 40여년동안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음.
- 특사는 중국측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상제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하여 통보하였음.
- 중국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하였으며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 상태를 고려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1994. 9. 2 외무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국 대표단을 소환시키로 결정한데 대하여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함.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임.

□ 1994. 9. 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관련 통일원 공보관 브리핑

-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며, 현재 한·미 양국은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음. 중국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1994. 9. 9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임.
- 오래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된 조건에서 이제 우리와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남조선 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공고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임.
-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 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음.
-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임.

□ 1994. 9.10 이홍구 통일부총리, 국회 ROTC 출신의원 모임 초청 간담회 발언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 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님.
-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 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으니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

□ 1994. 9.14 이세기 민자당 정책위 의장, 고위당직자회의 발언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의 진전과 함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임.
- 남북이 당사자원칙아래 평화체제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상호 불가침 조항의 세부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1994. 9.15 이홍구 통일부총리, 갈루치 미국무차관보 면담시 발언

- 남북관계 진전없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므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함.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미·북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과제도 아님.

□ 1994. 9.24 북한, 박길연 유엔대표부 대사명의로 UN안보리 의장에게 대미 평화협정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전달 및 이를 안보리 문건으로써 모든 회원국
에게 배포 요청

- 1994.10.27 군사정전위 중국측 대표단, 북한군 관문점 대표부
작별 방문(중앙통신 보도)
 - 군사정전위원회에 와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조선에
서 철수하기에 앞서 10.27일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를 작
별 방문했음.
 -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이찬복 대표와 대표부 성원들이
작별 방문해 온 정도군을 비롯한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성
원들을 맞이했음.

- 1994.11. 4 한승주 외무부 장관, 제주 호텔신라 내외신 기자
회견
 - 남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련국들
이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부록 2]

「평화협정」 관련 쌍방 주요
제의·주장 전문

〈 부 록 목 차 〉

[1] 북한 남일 외상,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 1 차 연설 (1954. 6. 15)	99
[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11차 회의 채택 대남편지 (1962. 6. 21)	102
[3]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 연설 (1962. 10. 23)	104
[4] 김일성,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기자 「다까끼 다께오」와 회견 (1972. 1. 10)	107
[5] 남북조절위원회 제 2 차 회의 북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1973. 3. 15)	109
[6] 남북조절위원회 제 2 차 회의 우리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발언 (1973. 3. 15)	111
[7] 남북조절위원회 제 3 차 회의 북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1973. 6. 12)	113
[8] 남북조절위원회 제 3 차 회의 우리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조발언 (1973. 6. 13)	115
[9] 박정희 대통령,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 6. 23)	115
[10] 김일성, 체코 당 및 정부 대표단장 「후사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1973. 6. 23)	116

[11] 김용식 외무부 장관, 제 28 차 유엔총회 제 1 위원회 연설 (1973. 11. 15)	120
[12]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 1. 18)	123
[13] 북한 허담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제 3 차 회의 보고 (1974. 3. 25)	128
[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1974. 3. 25)	139
[15] 박정희 대통령,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 1주년 담화 (1974. 6. 23)	143
[16] 박정희 대통령,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4. 8. 15)	144
[17] 북한 이종목 외교부 부부장, 제29차 UN총회 제 1 정치위원회 연설 (1974. 11. 25)	146
[18] 김동조 외무부 장관, 제 29 차 유엔총회 제 1 위원회 연설 (1974. 11. 29)	148
[19]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5. 1. 14)	150
[20] 박정희 대통령, 일본 「JAPAN TIMES」지 기자회견 (1975. 6. 29)	155
[21] 제 30 차 유엔총회 공산측 결의안 상정 관련 북한 정부 성명 (1975. 8. 11)	156
[22] 제 30 차 유엔총회에 2개의 상반된 결의안 제출 관련 북한 외교부 비망록 (1975. 8. 17)	160
[23] 김동조 외무부 장관, 제 30 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1975. 10. 21)	169
[24] 북한 이종목 외교부 부부장, 제30차 유엔총회 제 1 위원회 연설 (1975. 10. 27)	174
[25] 박정희 대통령, 일본 마이니찌(毎日) 신문 기자회견 (1975. 11. 13)	181
[26] 김일성,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국장과의 담화 (1976. 3. 28)	184
[27] 박동진 외무부 장관 성명(1976. 5. 13)	186
[28] 박정희 대통령, 일본 「후지」(富士)TV 특별회견 (1977. 12. 23)	188
[29] 한미 공동성명 - 공동성명중 관련조항(1979. 7. 1)	191
[3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1979. 7. 10)	192
[31] 북한 이종옥 정무원 총리, 제 6 차 불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연설 (1979. 9. 6)	197
[32]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 당국에 보내는 편지 (1984. 1. 10)	198
[33]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상 · 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1984. 1. 10)	201
[34]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1984. 1. 11)	205
[35] 진의중 국무총리 대북서한 (1984. 2. 10)	206
[36]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대한민국 진의중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편지 (1984. 3. 7)	207

[3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미국 국회(상·하원)에 보내는 편지 (1988. 7. 20)	210
[38] 노태우 대통령, 제 43 차 유엔총회 연설 (1988. 10. 18)	213
[39] 노태우 대통령, 제 45 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0. 8. 15)	215
[40]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강영훈 총리 기조발언 (1990. 9. 5)	216
[41]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 총리 기조 발언 (1990. 9. 5)	219
[42] 노태우 대통령, 제 46 차 유엔총회 연설 (1991. 9. 24)	222
[43]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 기조연설 (1991. 12. 11)	224
[44]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 (1991. 12. 11)	227
[45]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7 차 회의 우리측 이동복 위원장 기조발언 (1992. 8. 28)	228
[46]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7 차 회의 북측 백남준 북측 위원장 기본 발언 (1992. 8. 28)	232
[47] 북한 송원호 외교부 부부장, 제 48 차 UN총회 연설 (1993. 10. 5)	234
[48] 북한 외교부 성명 (1994. 4. 28)	235
[49] 외무부 당국자 논평 -북한의 한반도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대미 협상제의 관련 (1994. 4. 29)	237

[50] 북한 외교부 비망록 (1994. 4. 30)	238
[51] 통일원 대변인 성명 -북한의 군정위 기능 중지 관련 (1994. 5. 3)	254
[52] 북한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기자 질문에 대답 (1994. 5. 6)	255
[53]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1994. 6. 3)	256
[54] 북한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1994. 6. 10)	259
[55] 군사정전위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와 관련한 북한방송 보도 (1994. 9. 2)	261
[56] 외무부 대변인 논평 (1994. 9. 2)	263
[5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4. 9. 9)	263

[1] 북한 남일 외상, 「제네바 정치회담」 최종회의 제 1차 연설

(1954. 6. 15)

〈전략〉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선문제의 조정이 국제관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정전의 공고화와 정전으로부터 평화상태에로의 점차적 이행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할 것을 본 회의에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외부로부터 조선인민에게 강요된 가혹한 전쟁은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오늘도 조선에서 사라지지 않았 습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재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정전협정 조건들을 무시하면서 남조선에서 광범한 전쟁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공식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군대는 정전 후 벌써 4개 사단이 증가되어 16개 사단으로부터 20개 사단으로 되었으며 앞으로 도 급속한 시일내에 또다시 15개 보병사단과 대규모의 공군연합부대를 창설할 것 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 및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들이 진실로 조선의 평화유지를 갈망한다면 제네바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상태의 공고화와 우리나라에서 정전상태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조선에서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상태의 완화와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 회의가 일정한 기한내에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분기별로 전조선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해당한 국가정부들에 권고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조선의 현존하는 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조선에서 정전으

로부터 평화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대책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의견에 의하면 만일 전쟁재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조선에 대량의 군대를 보존하여 둘 필요는 없습니다. 동원에서 해제된 조선군인들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평화적 노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 유지비의 축소는 인민경제의 복구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출을 증대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외국군대의 철거와 남북조선의 군대를 축소함에 관한 제 대책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정부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들을 심의하면서 남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남조선에 미국의 무력을 무기한으로 주둔시키는 권리를 부여한 소위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조약은 남조선 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강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약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타산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의 평화강화의 과업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 관계, 주민들의 통행, 서신의 자유, 과학·문화교류 및 기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아직까지 조선의 정치적 통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우리나라 남북사이의 연계를 회복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할 것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들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조선 대표들로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전조선기관의 구성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 남북을 실제적으로 접근시키는 사업에서 중요한 걸음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남북조선 대표들간의 연계의 설정 및 우리나라 남북이 관심을 가진 절

박하고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현재 조선에 조성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킴에 도움을 줄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경제복구를 위한 과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해안봉쇄와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조선 인민은 미국측의 이와 같은 전횡을 용허할 수 없으며 우리 해안에 대한 비법적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상술한 국가들이 조선에서 무장적 충돌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며 조선의 민족적 통일에 대한 과업의 급속한 완수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본 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합니다.

〈방 안〉

—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 —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은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국가를 창건하는 기초우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데 관한 합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조선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할 것.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 기한은 제네바회의의 참가국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

둘째,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군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측 군대의 수효 10만명을 넘지 않게 할 것.

셋째,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네째,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이익과 양립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다섯째,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제선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과학·문화교류 및 기타 관계를 설정하며 그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기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을 단일한 독립적 민주주의적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급속히 해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

우리는 우리 방안에 예견된 대책들의 실사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로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채택 대남편지

(1962. 6. 21)

〈전략〉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침〉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남조선측으로부터 먼저 공격하여 오지 않는한 결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조선정권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하에서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조선 정권당국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을데 대하여 의무를 지며 남북조선 군대를 각각 최소 한으로 축소

할 것을 루차 제의한 바 있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북조선에 그 어떤 외국군대가 남아 있다는 듯이 떠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허위선전에 기만 당하고 있다.

북조선에서 1948년에 소련군대가 철거하고 1958년 중국인민 지원군이 완전히 철거하였다는 것은 만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조선에 외국군대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이 북조선에 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곳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온갖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오늘 미국침략군대는 남조선에 남아 있을 하등의 이유와 구실도 없으며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된다면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양키들에게 매일 매시각 학살 당하고 억압당하고 모욕 당하는 민족적 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남조선의 현당국자들은 인민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미군철거문제를 반드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 조선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축소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민족의 장래문제에 대한 이해를 접근시키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혹은 서울에서 협상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들을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조선사람끼리 남북조선 당국자들 간에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판문점에서 미국양키들과도 마주앉아 담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동족끼리 우리영토안에서 협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접촉과정에 호상 이해가 접근될 것이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조선군대를 축소한다면 남조선인민 대중을 과중한 군사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조선 인민들도 생활상 도움을 받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에도 또한 유리한 전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불행과 고통의 절정에서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

하기 위하여 일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전민족의 역량을 미군철거를 위한 거족적 투쟁에 동원하자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만일 우국충정에 넘치는 우리의 이 제의에 응하지 않고 <반공>을 방패로 삼아 미국침략군대를 남조선에 그대로 두어 뒀으로써 우리 동포들을 양키 침략자들의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얽매여 두고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계속 받게 한다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조국과 민족 앞에 섰을 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후략>

[3] 김일성, 최고인민회의 제 3기 제 1차 회의 연설

(1962. 10. 23)

<전략> 우리나라의 통일은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고 남조선 사회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는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조선에서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흉책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신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입니다.

역사상 외래침략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외세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국가의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미국침략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킴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식민지적 노예의 처지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분열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적 념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면서 국가의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 자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이며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주둔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같은 허위로써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시종일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써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전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 낸 병풍에 불과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조선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선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외국사람들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의 내정문제이며 오직 조선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망상이며 그것은 전조선을 제국주의적 침략에 내어 맡기자는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업입니다.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면서 발광적으로 새 전쟁도발음모를 꾸미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견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루차 제기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왔습니다.

조선인민은 동족상쟁을 원치 않으며 국내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노동의 열매를 탕진할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군대를 증가하고 군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무력을 축소하고 긴장상태를 제거함으로써 남북조선이 다같이 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조선인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70만의 고용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와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으로 되며 조선에서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조선간의 평화협정의 체결과 군대의 축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 것입니다.

남북간에 긴장상태가 철거되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략>

[4] 김일성,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기자 「다까끼 다께오」와 회견

(1972. 1. 10)

〈전략〉 지금 시대는 달라졌고 정세는 변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UN」의 이름을 빌어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던 지난 40년대와는 같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때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 코도 씻기 바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동족을 등지고 미제침략자들의 옷소매에 매달리며 일본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살구멍을 찾던 지금까지의 반민족적 입장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참다운 출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민족적 입장에 돌아서야 하며 지금이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실력을 배양」하여 북조선을 힘으로 누르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견어치우고 조선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방침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내부문제인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8개 항목의 구국방안과 8월 6일 연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방침들을 다시금 밝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이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전 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단계」를 운운하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할 수 없다느니 어떤 것만 먼저 하고 다른 것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연전술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좋게 끝나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게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북사이의 격폐된 감정을 풀고 이해를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북진통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있지도 않는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접촉과 관계를 강화하고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민족분렬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는 수 많은 문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남북정치회담을 통하여서만 원만히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아무때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담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만나도 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면 남북조선의 여러 정당들 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정견들을 교환하고 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하기 위한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협상과 접촉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의 죄과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와 함께 기꺼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 것입니다.

조선사람이 모두다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한길에서 싸워 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미·일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남조선에 드리운 망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아직 곡절을 겪고 있기는 하나 조만간에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 남북조절위원회 제 2차 회의 북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1973. 3. 15)

<전략>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됨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념원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긴장상태의 완화으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에 부합되고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민들의 지향과도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이 고위급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풀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마수고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하게 쌍방사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항목의 제안을 협의할 것을 본회의에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

둘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

셋째, 외국으로 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넷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풀기 위하여 쌍방무력의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망라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과 남사이에 확고한 신임의 전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념원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안이 실현되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가 극속히 완화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새 국면이 열릴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수 많은 청장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더욱 고무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인민들로 부터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척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현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일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없으며 이 문제의 토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오해와 불신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되고 대결과 분렬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며 결국은 평화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28년동안이나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온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거역하는 것이며 절박한 민족적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서로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20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까지 한 조건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가, 안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여부는 쌍방의 입장과 태도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어떤 시기나 단계가 문제로 될 수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장애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선다고 하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면 조국통일에 대한 온겨레의 역사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시키겠는가, 이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견지에 서서 통일을 촉진하는데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라면 그것이 어렵건 쉽건, 크건 작건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그 문제부터 협의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당면한 중심고리로 되는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선행시켜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문제등을 동시에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앞에 제기된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절위원회 안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외교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와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이러한 모든 사업은全民적 전 인민적 위업인 것 만큼 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어 여기에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을 참가시킴으로써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온 민족의 총의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후략>

[6]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우리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발언

(1973. 3. 15)

<전략> 귀측에서 제의하는 평화협정이나 또는 군비축소, 이것 모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평양에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누차 강조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뢰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바탕이 없는 속에서 군비를 축소한다, 또는 더군다나 6·25동란이라는 엄청난 민족상잔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당장 군비를 축소한다, 평화협정을 가진다는 것은 누가 이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같이 서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해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거기에서 당연히 그러한 문제는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 총생산의 5%에 해당되는 군비를 충당해 가면서 60만 군대를 유지하기에는 힘겨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귀측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귀측 스스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한 열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군과 군이 마주앉아서 이야기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폭력혁명지령이 전파를 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사람이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또 모처럼 평양을 방문한 내 방에까지도 터무니없는 사실로 대남비방하는 통일신보란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내가 마음을 놓고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귀측이 내 입장이 되더라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비축소문제나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진정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그러한 행위부터 먼저 중지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속에 말로만 평화협정 군비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더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의 긴 여러가지 애국애정에 넘친 제안에는 근본적으로 동의의 하나, 추진하는 절차, 순서, 방법 또는 가장 내가 중요시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는 바탕위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또 그러한 순서를 다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의한 경제와 사회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귀측 의견에 대충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략>

[7]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북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기조발언

(1973. 6. 12)

<전략> 우리는 이번 조절위원회 제 3차 회의가 민족적 사명감에 대한 우리들의 투철한 인식밑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고 우리들의 공동위업을 전진시켜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밝은 전망을 열어 놓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토의하자고 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평양회담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문제가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상호이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도 관건적인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 사이의 오해와 불신임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맞서 있으면서 군비경쟁을 계속한다면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 수 없으며, 오해와 불신임도 해소할 수 없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 서로 총칼을 품고 있으면서 합작하고 단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서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북과 남 사이에 신의있는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응당 품고 있는 총을 내놓아야 하며, 차고 있는 칼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

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 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5개 항목의 제안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제안은 유감스럽게도 귀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쌍방의 견해차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 원칙에 충실하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는다면 능히 좁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늦추는가,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위업을 이룩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결을 계속하고, 군비경쟁까지 강화하는데로 나간다면 결국은 쌍방이 공동으로 마련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도 이행할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과 남 사이에는 호상 반목의 대결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나라의 긴장상태는 풀리지 못할 것이며, 인민들이 열망하는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외세가 바라는 민족의 분렬이 지속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온 민족의 단결하여 나라의 분렬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두개 조선으로 고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자주적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염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상과 이념,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대화에 나서게 된 근본이념이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결하며 우리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데 있는 이상 대결이나 경쟁이나 공존이 아니라 대화있는 단결, 대화있는 합작, 대화를 통한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이 응당 가져야 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쌍방이 다같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한다면 능히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측의 5개 항목 제안도 쌍방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후략>

[8]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우리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조발언

(1973. 6. 13)

〈전략〉 귀측에서는 군비경쟁이나 군축이나 또는 외부로부터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와 이를 막는 문제 등 그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첫째 주장에 대해서 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 2차 회의에서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입장과 주장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단한 합의마저도 지킬 수 없는 이러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볼 때에 이번에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면 그 협정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이 다같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켜 주고 그런 연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지, 현재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조그만한 사항마저도 실천이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는 것은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 빨리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주장을 이해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후략〉

[9] 박정희 대통령,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1973. 6. 23)

〈전략〉 친애하는 오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

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후략>

[10] 김일성, 체코 당 및 정부 대표단장 「후사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1973. 6. 23)

<전략> 우리는 오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

주적 평화통일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합니다.

1.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은 현시기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호상 이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임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우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속에 칼을 품고 평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에 품고 있는 칼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로 믿음의 분위기를 마련할 수 없으며 북과 남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 항목의 제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이 긴급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부차적 문제들이나 이리저리한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 신임을 두터이 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며 민족분열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열을 유지하며 고정화 하자는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참말로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

려 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버리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2.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는 끊어졌던 민족적 유대를 다시 있고 통일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가 실현되어야 북과 남사이에 맺게될 평화협정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서로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자고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간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교류와 합작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끼리 합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와 결탁하고 외래독점자본을 제한없이 끌어들여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예속경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오물단지」로 배척당하고 있는 공해 산업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 나라의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우리 민족에 이롭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합작을 실현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3.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북반부의 노동자, 근로농민, 노동인테리, 청년학생, 병사들과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

급과 같은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히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4. 오늘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된 조건에서 대민족회의를 소집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방국가의 국호는 우리 나라의 판도 우에 존재하였던 통일국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쌍방에 다같이 접수될 수 있는 좋은 국호로 될 것입니다.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은 나라의 분열을 막고 북과 남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완전한 통일을 앞당기는 길에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입니다.

5. 우리는 분열이 고착되어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대외관계 분야에서도 북과 남이 공동으로 나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것을 두개 조선을 조작하는데 이용하려는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UN에도 북과 남이 각각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UN에 들어가려 한다면 적어도 연방제라도 실현된 다음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UN가입문제와는 달리 UN에서 조선에 관한 문제가 상정 토의되는 경우에는 응당 우리 공화국대표가 당사자로서 거기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코 둘로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UN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이 조국통일방안이 실현된다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의 공통된 염원에 맞게 평화적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새로운 공정한 통일제안에 성의를 가지고 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후략>

[11] 김용식 외무부 장관, 제28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1973. 11. 15)

<전략>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본인은 한국문제에 관하여 제출된 두개의 결의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두 결의안은 그 접근방법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은 우선 그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점을 거론코자 합니다.

첫째로, 북한측 입장 지지자들은 한국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중지하는 것이 휴전을 지속적 평화로 전환시키고, 남북대화를 원만히 촉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는 관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정한 상황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우리 국내문제가 외세에 의해서 간섭받거나 조정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래 북한은 한국 전역에 걸쳐 총선거를 통한 민주, 대의정부를 수

립한다는 주요 원칙을 단호히 거절해 왔습니다.

북한은 1954년 제네바 회담이래 한반도에서 UN군사령부와 외군은 한국 국내문제를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UN군사령부의 해체를 부단히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계속 인류의 양식과 합리성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권위, 권능에 도전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패색하게도 UN군 사령부를 「외군」으로 규정하고 또한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UN군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전폭적인 동의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결의안은 평화조약 체결, 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분야에서의 다방면의 협조와 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어떤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UN군사령부 해체 및 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군이 전면 철수한지 불과 몇 개월 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적 침략으로 야기된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 기록과 관계 결의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또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는 소위 평화협정이 남북한 UN동시가입안을 반대하는 북한측 입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또한 조국의 영구 분열을 막기 위하여 단일국가로 UN에 가입하자는 그들의 제안과도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자가당착적인 제안을 내세우는 궁극적 목적은 한국에서 UN군을 철수시키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위태롭게 만들려는 그들의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북한측이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호주 및 26개국이 제출한 결의안의 결론 부분에 관한 아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동 위원단은 국제연

합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그의 자진 해체를 권고하였습니다.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은 국제연합 회원국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총회 결의에 따라 1950년 10월 대한민국의 재건 및 부흥과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위원단이 1950년에 처음 임무를 개시할 당시, 대한민국은 치열한 전투로 초토화 되었으며 극심한 피난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적대행위 끝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동 위원단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그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열의와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동 위원단은 세계 모든 평화애호국의 끊임없는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하여 이 위원단이 한국에서 이룩한 현실적인 업적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위원단의 전술한 권고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주한 UN군사령부에 관한 것입니다. UN군사령부는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협정 준수를 보장하는 의무의 일환으로 휴전협정 체결이래 도합 344차에 걸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UN군사령부는 이 지역에서의 전쟁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왔으며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UN군사령부의 해체는 휴전협정의 주요 일방 당사자를 제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휴전협정의 사실상의 무효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유일한 기관이며 또한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재개에 대한 유일한 제도적 억제력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의 해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대안없는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의 철수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전례가 있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UN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하는 것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UN군의 철수는 한국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UN군 사령부를 설치한 안전보장이사회가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감소되는 적당한 시기에 관계 제 당사자와 더불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건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의 외군 주둔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상세히 논평할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상호합의와 우리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또한 관계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다만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양자 혹은 다자협정에 의거, 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외국군대의 주둔은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명백히 보장된 자위조치의 하나인 것입니다. 기실 각 국가는 스스로 그러한 조치가 요청되는지 여부를 결정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알제리아 등이 제출한 문서(A/C.1/ L.644)에 포함된 결의안은 한국의 현상을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비타협적인 북한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우리는 문서(A/C.1/ L.645)에 포함되어 있는 호주 및 기타 26개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평화와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발전과 민족적 화해를 조장시킬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 입각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후략>

[12]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4. 1. 18)

문 : 북한에서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체결에 대해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 3년 전인 1971년 8월에 「뉴우요크 타임즈」의 어느 기자가 중공을 방문했을 때 주은래 중공수상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측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여러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해서 이런 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냐,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따져 보면, 서너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앞으로는 군비경쟁을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장비나 군수물자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지금 있는 휴전협정은 없애 버리자, 여기에 평화라는 말을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평화」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현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다 나가고 군대는 10만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로부터 무기는 절대로 들여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 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장해제를 시켜 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 평화하지만 이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음모와 계략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번쯤 속을지 모르지

만,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 한번은 속지마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요즈음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남북한 연방제」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 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것과 꼭 같은 그런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격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평화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 당시에 그 협정조문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협정이 되던 그날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남한이나, UN군측이나, 공산군측이나 무기를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산측에서는 이것을 먼저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자꾸 반입하기 때문에 UN군측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공산측에서는 들은 채 만 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문은 죽은 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베트남 휴전협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 체결후 1년이 됩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위반사건이 있고, 수십번 전투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 운운하는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 동안에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모든 전쟁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들고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선전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남한에 제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새로 맺지 않고 지금 있는 휴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전쟁은 막을 수 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후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가 알기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은 13,000여 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공동성명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해해역을 자기들 관할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 공동성명의 정신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성의와 의사가 없으면, 이러한 협정을 열번 스무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자, 그 동안에 서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6·23 평화통일의교정책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남북이 활발히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이 6·23 선언의 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겉으로는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평화를 원하는 체하면서, 뒷전으로는 탄전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13] 북한 허담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3차 회의 보고

(1974. 3. 25)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입니다.

우리 조국이 인공적으로 분열된 때로부터 벌써 근 30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이미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렬로 하여 너무나도 큰 불신과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렬로 하여 우리 나라는 통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적 공통성은 더욱더 사라져가고 남북으로 갈라진 매개 조선사람의 가정에 끼친 불행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됨으로써 남북간의 불신은 깊어가고 긴장상태는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전쟁위험은 상시적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끝없이 계속된다면 유구한 역사를 두고 한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서게 될 것이며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상품판매시장으로 전락되고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근원은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평화에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오래동안 격폐상태에 놓여있었던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이것을 조선의 평화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 아세

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남북 대화가 진척되어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될 것을 한결같이 열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도상에는 의연히 커 다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태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염원과 기대에 배치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과는 반대로 외세의존과 전쟁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나라의 영구분렬을 꾀하고 있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배신행위로 하여 남북 대화는 정체상태에 빠져들어갔으며 사실상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성명발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의 조선이냐 하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전진시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문제가 더욱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번 최고 인민회의 제 5기 제 3차 회의앞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기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켜야 하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하며 불안정한 조선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평화적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하여 적극 힘썼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셔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막대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사이의 불신임도 전쟁의 상시적 위험도 제거할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남북사이에 존재하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더이상 지속시키지 말아야 하며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남북조선 전체인민들의 공통된 절절한 염원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염원을 반영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련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으며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후에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여러차례 내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8월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과 함께 남북조선당국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으며 조국의 통일문제를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질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앞에 선포할 것을 제기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1957년 9월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와 그 이후에 있는 여러차례에 걸친 최고인민회의들에서 남북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군대를 대폭 줄일데 대한 제안을 거듭 내놓았습니다.

1971년 4월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 4기 제 5차 회의에서는 8개항목의 조국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 「정권」이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연속적인 조약을 폐기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수령님께서도 1972년 1월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새롭게 천명하시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제기하였습니다.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5개항목의 제안은 남북쌍방의 신임의 실제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에서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방지하며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도로 됩니다.

수령님께서도 1973년 6월 23일 역사적인 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천명하시면서 그 첫조항으로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실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었습니다.

이 방안은 동족상쟁을 겪지 않으려는 민족적 염원을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조선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애국적인 방안이며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안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기울여온 이 모든 성의있는 노력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을 종국적으로 제거하고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평화애호적인 입장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놓은 평화적 발기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긴장상태가 격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양면전술에 매여달려 대화에서 결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공화국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시기상조」라느니 지금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느니하고 거부하였으며 도리어 「보복능력제고」, 「임전태세확립」이라는 호전적 구호밑에 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여 왔습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미국군대의 남조선장기주둔을 애걸하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여 괴뢰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으며 전연과 후방에서 매일과 같이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벌려놓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거듭 명백히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을 얻어보려고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서해사건」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소동의 한 고리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얼마전에는 그 무슨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기한 평화협정을 반대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이며 남조선에 미제 침략군을 그대로 남겨두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여 현 군사파쑈통치를 부지해 보자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군대의 통수권을 직접 틀어쥐고 있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UN군사령관」의 간판을 가진 미군사령관입니다.

이미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협정에 의하여 미군사령관은 남조선괴뢰군 육해공군무력의 「통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작전적 통제를 실시할 근거」를 가지었으며 「서울방위권」까지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군사령관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과 군사기지, 군사시설들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 남조선군대의 편성과 그의 이동배치, 장교의 승진, 사병의 훈련과 휴가승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 손아귀에 틀어 쥐고 있으며 남조선군대의 그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도 미군의 간섭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군대를 남조선에 남겨둔채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들고나오는 그 자체부터가 가소로운 일이며 아무런 의의도 없고 논의를 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의 바로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사태는 통일대신에 분렬으로, 평화대신에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발기들을 덮어놓고 거부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다시 격화시키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모든 행동을 부추긴 장본인은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대한 주되는 책임이 미국정부당국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3월 4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안팎의 정세를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 방도를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남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미일반동들의 책동을 허용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게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자주적이며 통일독립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분렬된채로 살자고 하면 남북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사람치고 누가 조국과 민족이 영구분렬될 것을 바라겠습니까. 남북대화는 반드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열책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진실로 통일을 위하여 대화의 길로 나섰다고 믿을 수 없는 것 만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문제를 남북당국자들 사이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탄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시어 현존하는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개로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열것을 다시하번 제의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어느 때나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수령님의 3월 4일 연설은 통일을 갈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무한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위대한 투쟁의 기치이며 평화적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입니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5대강령과 함께 그이께서 3월 4일 연설에서 천명하신 평화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평화적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말 결의에 더욱더 불타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나라의 분렬을 막고 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렬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현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지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이룩되려면 새 전쟁의 위협한 불씨를 안고 있는 남북사이의 현 군사적 대치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고 긴장상태가 가셔져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

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지 그것으로써 항구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랜 시일이 지난 오늘 정전협정은 그 자체가 이미 낡았
으며 많은 면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더는 지체
할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실태에 비추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들에서 현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데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여 북과 남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남조선측에 거듭 제의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내놓았던 것입
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3대원칙에 동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회담에 응해 나온것만큼 그들이 응당 남조선
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조선사람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
결하는데로 성실하게 나오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그대로 자주적 원칙을 비롯한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들에 충실하였다면 능히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
사이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을 것이며 조선사람들끼리 통일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전과정은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남아있는 조건에
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지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도대체 남조선당
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었습니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호상 합의한지 만2년이 가까와
오는 오늘날에도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의 지배밑에 놓여있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의 활무대로 되어 있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그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 사실은 그것을 논박할 여지없이 확증하고 있
습니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당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쌍방이며 실제상의 당사자들입니다.

처음에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과 「UN군」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조선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하였으며 남조선에 있는 이른바 「UN군」이란 오직 미군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선의 자주적 통일에 장애로 되는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하며 조선사람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구경 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서 항시적인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국의 내정간섭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의 내부문제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자는 것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오늘 조선에서 불안정하고 긴장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근원은 다름아닌 미제의 간섭책동에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시작된 이외에도 분렬을 고취하고 정전협정을 계속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수많은 각종 현대적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대주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 도발행동과 군사연습소동을 벌리고 있으며 「SR-71」 고속도 고공정찰기에 의한 정탐과 적대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언제까지나 주둔시키고 남조선 파쇼정권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그가 대주는 총칼을 휘두르면서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의 구실밑에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선 남조선당국자들을 뒤받침해 준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기 때문에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와의 「힘의 대결」을 부르짖으며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서의 평화의 유지와 평화적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대화의 배경에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겠습니까. 이것은 다 분렬을 고착시키자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분렬이 끝없이 유지되고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당국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간섭책동이 종식되어야 하며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물러간다고 하여 무슨 난리가 일어날 것도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물러가기만 하면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생활양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될 것이며 조선인민은 자신이 원하는데 따라 나라의 평화통일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며 그 어떤 힘도 강제로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우리 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에는 응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 것.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

우리 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그것으로써 현군사정전협정이 대체된다면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의 위협성을 배태하고 있는 근본요인이 제거되고 군사적 대치상태는 해소될 것이며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는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며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의하여 조선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조선문제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조치로 될뿐 아니라 아세아와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미합중국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문제토의를 위한 장소는 현재 쌍방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이 적당할 것이며 호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제3국도 무방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중대성으로 보아 토의에 참가할 쌍방대표단은 조선군사정전위원회보다 한급 높은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의 현 당국자들이 공담으로서가 아니라 진실로 조선에서의 평화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하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성의있게 문제토의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UN」의 이름으로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에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앞에 지닌 회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인정합니다.

온갖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내부분제를 민족자결의 권리에 따라 조선사람들 자신의 손에 의하여,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협상과 합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적극 지지하여 온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인민들이 공화국정부의 이번 제안을 모두 힘을 다하여 적극 지원 성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조선인민에게는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망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갈라진 조국의 북과 남, 해내외의 전체조선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간다면 능히 남조선에 대한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를 우리 조선인민 스스로의 손으로 성과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세대에 기어이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온 민족의 단합된 지혜와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대로를 힘차게 개척하여 나아갑시다.

[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상·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1974. 3.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 국회 상, 하양원에 이 편지를 보낸다.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 인

민들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통일문제 해결의 밝은 전망으로 큰 고무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거의 두해가 지난 오늘 조선에서 사태발전은 인민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

긴장상태는 일시 완화되는 것 같았으나 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전망 대신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날로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응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사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평화통일을 촉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의연히 굳게 믿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군비축소,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만일 우리의 평화적 발기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었더라면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보장되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이 긴장상태가 다시 격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를 줄이며 외국군대를 내보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여도 그에 응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 소동을 끊임없이 벌려 놓으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간청하며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왔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

나라 미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통수권을 갖지 못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미국군대를 그냥 남겨둔채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할 수 없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발기들을 덮어놓고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모든 행동을 부추긴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화의 배경에 무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와 무력지원을 강화하고 공화국복반부를 반대하는 도전행위와 군사훈련, 고속도 고공정찰기에 의한 정탐행위를 빈번히 감행하며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한 주되는 책임이 미국정부당국에 있다고 인정한다.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지고 있다.

현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장애로 되는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하며 조선사람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하였으며 「UN군」 측에서 남아있는 군대도 오직 미군뿐인 조건에서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결 쌍방으로서 실제적 당사자로 되고있다.

오늘 정전협정은 그 자체가 이미 낡았으며 많은 면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 충돌의 모든 위협성을 제거할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 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것이다.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이다.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전제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회담은 지금 판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보다 한급 높은 대표들로 구성하며 회담장소로서는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 때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에서도 개변이 일어날 것이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발기는 미국인민의 이익과 세계평화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 국회와 미국 정부당국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신중한 고려를 돌리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974년 3월 25일 평 양

(1974. 6. 23)

<전략>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상화에는 아무런 성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도서에 대한 새로운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기습공격용 신무기를 대량 도입하고, 특히 휴전선 인근지역에 해·공군 기지를 신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광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8일 북한측에 대하여 상호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또 다시 우리의 이 진지한 제의를 외면한 채 우리에게 대한 비방, 중상의 계속은 물론, 무장간첩의 남파 침투를 격화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북한포함이 서해공해상에서 평화롭게 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의 어선을 격침 나포하고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납치하는 등,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결음 더 나아가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 사회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함으로써 적화통일의 야욕을 노골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평화협정 운운으로 위장평화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들이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이야말로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길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무력적화통일전략에서 연유된 모든 부정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한,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이 단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곤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

는 대전제임을 믿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잠시도 중단하거나 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6·23선언 한 돌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인내와 성실로써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측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하루속히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버리고 7·4공동성명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즉각 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나는 북한측이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과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없이 남북간의 불가침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나는 3,300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UN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와 동시에, 1,400만 인구의 북한도 우리와 같이 UN에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후략>

[16] 박정희 대통령, 제29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4. 8. 15)

<전략>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온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기본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환경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한시 바빠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4 남북공동성명과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정착이 이룩되지 않은 곳에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우방에 대해서도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6·25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후략>

[17] 북한 이종목 외교부 부부장, 제29차 UN총회 제1정치위원회 연설

(1974. 11. 25)

<전략>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침략의 목적에서 남조선에 계속 자기의 군대를 남겨두려 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을 맺자는 우리의 제의에 여태껏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우리의 제의를 외면합니까.

대표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은 평화에로 나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미국은 왜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외국군대는 다 나가며 조선사람끼리 조선통일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라고 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고 남조선에 자기군대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서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탄압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 것.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

넷째,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 종식되고 조선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뿐 아니라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에 제기되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는 벌써 제3자가 개입할 문제인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 자체의 내부문제로서 남북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간 다음 제기되는 문제들을 북과 남의 군사당사자들 사이의 쌍무적 군사회담을 통하여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화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군사회담에서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남북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담보문제,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무장충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쌍방이 조선정전협정의 중요조항들을 이행할데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을 비롯한 새로운 군사적 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현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할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문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경쟁과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남북공동군사위원회외에 그 어떤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면 북과 남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존속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조건에서 북과 남사이에 쌍무적 군

사회담을 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여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쌍방간의 합의를 이행하여 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 평화 유지의 확고한 담보는 마련될 것입니다.

[18] 김동조 외무부 장관, 제29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1974. 11. 29)

<전략> 우리는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할 것을 본 위원회앞에 남북한이 함께 굳게 맹서할 것과 박대통령이 제의한 불가침협정체결을 수락할 것을 북한대표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본인은 이제 주한 국련군사령부의 역할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련군사령부는 한국휴전협정의 일방 서명 당사자로서 한국에서의 휴전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공헌하여 왔습니다.

선후책없이 국련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가 소멸됨으로, 휴전체제가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련군사령부의 중요한 역할과 국련군사령부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창설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국련군사령부의 장래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련군사령부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적의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들과 적절하게 교섭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북한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련군사령부와 미군은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한 일이 결코 없으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실로, 주한 국련군이나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공공연한 침략야욕과 끊임없는 도발때문입니다. <중략>

의장,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한국문제에 관한 2개의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대표단은 여러분에게 다음 몇가지 중요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북한에 의하여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 대화를 통하여 비로소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이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 화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대표단은 대화가 아무 선행조건없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것이 바로 작년에 본 위원회가 채택한 합의성명에 명백히 나타난 바, 본 위원회의 의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본 대표단은 국련군사령부의 장래문제에 관하여 동문제가 당사자들과의 협의하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우기 국련군사령부는 1953년 휴전협정의 일방 서명당사자로서 동 협정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국련군사령부가 효과적인 선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 막중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에 따라 본 대표단은 문서 A/C, I/L, 6F9에 포함된 결의안이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은 또한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현시점에서 국제연합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건설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한민국대표단은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 반면에 문서 A/C, I/L 677에 포함된 결의안은 국련군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구실로 이들의 즉각적인 철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동결의안은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역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역할을 훼손할 뿐입니다.

동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교란시키고 대화의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대표단은 문서 A/C, I/L 677에 포함된 결의안에 결단코 반대하는 바입니다.<후략>

[19]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975. 1. 14)

문 : 북괴는 우리가 제의한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거부하면서 UN군의 해체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작년 연초 기자회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의한 것이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이었습니다.

북한측에서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 아니냐고 제의를 했는데, 그 뒤에 북한측에서는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이북에서는 또 우리가 「남북상호불가침협정」제의를 하기 전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북평화협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여러번 정치 선전용으로 써먹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이름이 평화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위장된 하나의 기만술책이고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침략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 자들이 들고 나온 평화협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가 남한에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되고 UN군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남북이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축을 하자,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이하로 감축을 하자, 그리고 휴전협정을 철폐해 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한 불가침협정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이 서로 무력침범을, 여하한 형태든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만천하에 약속하자, 그리고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것을 비방하거나 간섭하지는 않겠다, 너희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싫어하겠지만 간섭하거나 이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행 휴전협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의한 상호불가침협정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왜 거부했겠느냐, 그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비와 같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야욕과 환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야욕을 기어이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무력도발도 해야 하겠고, 간첩도 앞으로 계속 보내야 하겠고, 테러단도 보내야 하겠고, 간첩을 보내서 지하당으로 조직해서 그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남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시켜야 하겠는데, 만약에 불가침협정을 맺어버리면 그들이 이런 장난을 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측에서는 덮어놓고 UN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28차 UN총회에도 그런 안을 냈고 작년 제29차 UN총회에서도 이런 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UN군이 이 땅에 와있는 것은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것보다는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이 불러들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1949년 말, 6·25가 나던 그 전 해에 38선 이남에 와있던 주한미군은 전부다 철수했습니다. 군사고문단 약간명만 남고 전원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해 6월 25일에 일제히 전면 남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UN군은 침략군을 저지하고 한국의 방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UN군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 있는 이유는 북한공산당들의 무력남침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또는 UN군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부터라도 UN군 사령부가 무작정 언제까지나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만약 UN결의라든지 UN안보이사회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UN군 사령부가 해체된다면 반드시 휴전협정만은 그대로 남겨 놓고 이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고, 또 우리 우방국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행 휴전협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유지·준수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만 된다면 UN군 사령부가 해체되는 것도 우리는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 제29차 UN총회에서 총회가 채택한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 뒤야 할 것은 만약에 UN군 사령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UN군 사령부 해체문제는 전연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여기에 와있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공산당들이 UN군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그 저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UN군 사령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UN군 사령부가 만약에 해체될 때에는 UN깃발 아래 있는 모든 주한미군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UN군 해체를 들고 나오는 것도 근본 저의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쭉 훑어 볼 때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목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들이 들고 나오는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

제일 첫번에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가침협정을 우리가 제의한 데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도 그것을 받아 들였다가는 미군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정간섭하지 말자, 휴전협정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 들였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말을 뒤바꾸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는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대민족회의」 운운하는 것을 나는 무엇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도 주한미군을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것인데, 한쪽에서 수백명씩 해서 남북 합치면 아마 500명에서 1천명까지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자는 것이냐, 그들이 노리는 저의는 무엇이나? 남북의 숫자는 같을 것입니다. 500명이면 남쪽이 250명, 북쪽이 250명, 1천명이면 남쪽이 500명, 북쪽이 5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공산당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의제가 무엇이나,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철수 결의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공산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몰고 나온 수는 푹푹 뭉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표들 중에는 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으니, 잘 공작만 하면 몇 표가 자기네 쪽에 슬쩍 동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50대 50으로 했는데, 이 쪽에서 몇 표가 그 쪽으로 가담만 하면 결국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철수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계산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전체 조선인민이 남한에 있는 외군철수를 지금 이렇게 결의했는 데도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떠들기 위해서 「대민족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북연방제」라는 것은 무엇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

아들일 리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연방제를 같이 의논해 보자하고 응한다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미군철수 문제일 것입니다.

미군이 있는 한은 「연방제」이고 무엇이든 남북대화가 안 된다, 이제 우리끼리 「남북연방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외군이다, 그래서 미국을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UNC(주한 UN군사령부)해체란 것도 UNC가 없어질 그 때에는 그것 발 아래 있는 미군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 외교적 선전의 최고목표, 투쟁목표가 주한미군 조기철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시켜 놓고 나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또, 우리 한·미 두나라 정부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음흉한 흉계와 저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양국간에 완전히 합의된 견해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몇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 한 이야기를 종합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공연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거든 「남북상호불가침협정」제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6.23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UN에 남북이 같이 가입을 하자.

셋째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를 한다면 UN군 사령부 해체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음에는 남북대화를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좀더 성의를 표시하라.

끝으로 또 한가지 더 제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북한측에서 우리와 같이 UN에 가입하는데 대해서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가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UN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들어가기 싫으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굳이 반대나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20] 박정희 대통령, 일본 「JAPAN TIMES」지 기자회견

(1975. 6. 29)

문 : UN총회는 주한 UN군사령부의 해체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며, 평양측은 이것을 「북한의 승리」로 간주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또한 주한 UN군을 대치할 새로운 평화유지기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그와 같은 UN총회 결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각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극히 불안정하나마 겨우 전쟁재발을 방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나마도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 공산집단은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서해 5도에 대한 영해 및 영공침범과 비무장지대내의 10여개소에 남침땅굴을 휴전선 남쪽으로 파내려오는 등 노골적으로 각종 침략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재발의 위험성은 작금에 이르러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현실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UN군사령부의 해체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현존 휴전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는 주한 UN군사령부의 해체를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회의 명백히 해될 것은 UN군사령부의 해체여부 문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한국주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두 개의 문제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은 재언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에서는 북한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의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후략>

[21] 제30차 유엔총회 공산측 결의안 상정 관련 북한 정부 성명

(1975. 8. 11)

「유엔」총회 제30차 회의를 앞두고 일련의 「유엔」성원국들은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때 대하여라는 문제를 올해 「유엔」총회에서 토의할 것을 제기하고 그에 따르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결의안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지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조선전쟁협정을 평화적으로 바꿀 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서는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므로써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켜 나갈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과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있는 이 결의안이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의정 및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 여러 친선적

인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결의안은 조선에 조성된 현 정세와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방도를 정당하게 제기하고 있다.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진지 30년이 지났으며, 조선에서 정전이 이루어진지도 22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가 의연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계속되는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정책 때문이다.

오늘도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 미군과 남조선군대를 증강하며, 남조선 당국자들을 사주하여 끊임없이 전쟁소동을 벌리게 하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남북 대결을 고취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조건에서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도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도 없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일련의 「유엔」성원국들이 결의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결의안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제기하고 있다.

원래 정전협정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협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서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거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측의 끊임없는 정전협정 파괴행위로 조선정전협정이 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오늘의 조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정전협정 자체의 요구에 비추어 보나 조성된 현정세에 비추어 보나 더욱 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국 국회에 편지까지 보냈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인 야망이 없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는데 참말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의에 응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함정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공고한 평화유지의 근본방도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을 준수하며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에 정당하게 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이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군대를 대등한 수준으로 확보하여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감독하는 실제적 조치들을 취한다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는 해소되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확고히 보장될 것이며,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결의안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요인을 제거하며, 이 지역에서 평화를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의 추종국가들은 지난 6월 27일 이와 정반대되는 결의안을 「유엔」에 내놓았다.

미국측은 결의안에서 전정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동의하는 조건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관 대신에 미군과 남조선군대의 장교들로 하여금 전정협정의 리행을 보장하도록 할 것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욱 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되게 되자 이 추세를 가로막아 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하나로서 결의안에서 마치 「유엔」군사령부라도 해체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나섰다.

그러나 미국측이 그 무슨 조건을 내건 것은 사실상 「유엔」군사령부마저도 해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측이 결의안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에 대해서만 운운하고 「유엔」의 깃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군의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엔」군사령부 해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미군은 남조선에 언제까지나 그냥 남아있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폭로한다.

그것은 지금 미국당국자들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도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들어나고 있다.

바로 미국측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에 자기측 서명자를 「유엔」군사령관 대신에 미군과 남조선 괴로군 장교로 교체할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미군의 남조선 영구강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침략적 요구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인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정전협정 자체도 그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다른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면 몰라도 그 서명자를 바꾼다는 문제는 애당초 성립될 수 없다.

미국은 지금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을 구실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황당한 소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데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요컨대 미국측 결의안은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명목 밑에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미군의 계속적인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며 「유엔」의 이름으로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책동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날 그들이 「유엔」에 제기하였던 그 어느 결의안보다도 더 기만적인 문건이다.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조선문제와 관련된 상반되는 두 결의안은 누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의 체제를 확립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누가 조선에서 불안정한 현 상태를 고착시킴으로서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 하기 위하여 애당초 「유엔」에 가입할 자격도 없는 남조선의 이른바 「유엔」의 가입신청서를 내놓고 늬음까지 벌렸으나 안정보장이사회 의정으로 상정도 못되고 문전에서 거절당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조선의 영구분렬 책동이 걸음마다 참패를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똑똑히 실증하여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응당한 타격을 가하고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남조선에서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을 철거시키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 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세계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중요한 고리로서 날로 커가는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

조선인민은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성원 밑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성취하 고야 말 것이다.

[22] 제30차 유엔총회에 2개의 상반된 결의안 제출 관련 북한외교부 비망록

(1975. 8. 17)

UN총회 제30차 회의에는 조선문제 토의와 관련한 2개의 상반된 결의안이 제출 되었다. 그 하나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련의 UN 성원국들이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 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의정과 함께 제출한 결 의안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제출한 결의안이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제출한 결의안이 조선에서 긴 장상태를 가지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실제적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미국측 결의안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지속시키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의 분리를 영구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문제 해결에서 상치되는 이러한 입장은 UN에 제출된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 결의안의 기본조항은 다음과 같다.

(1) UN군사령부를 해체하며 UN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2) UN군사령부가 해체되고 UN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

(3)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쌍방의 군대를 대등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켜 나가기를 요망한다.

이 결의안에 지적된 사항들이 실현된다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인민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① UN군사령부를 해체하고 UN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략>

미국측이 전쟁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3년 이후 1975년 7월 26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

전협정을 위반한 전수는 무려 17만2천5백여건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는 어느때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UN군의 모자를 쓴 미군을 남조선에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원래 미국군대는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것은 자주권의 존중, 내정 불간섭에 관한 UN헌장,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침략행위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남북공동성명과 그를 지지 환영한 UN총회 제28차회의 결정에 배치된다.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하나로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또한 UN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환영하고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서 대화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면서 UN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를 예견한 정전협정에도 배치된다.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조선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파괴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치회의는 소집되지 못하였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은 195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지역에서 주동적으로 전부 철거하였다.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 있을 어떠한 구실도 없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불력」불가담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1973년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 「불력」불가담국가 수뇌회의에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의 내정에 관한 온갖 형태의 의세의 간섭에 종식을 요구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인민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UN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군사정전협정을 바꾸는 것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전변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다.

조선에서 정전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긴장상태를 가시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원래 정전협정이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협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서는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거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늘 조선에서는 적대 쌍방의 평화조치인 정전협정이 있을 뿐이며 아직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는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22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으며 정전은 공고한 평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정전협정 파괴행위로 조선정전협정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된 오늘의 조건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기본을 이루고 있는 평화에 관한 조항을 끊임없이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에서 전쟁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56년 6월에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중립국 관찰소조의 활동을 부당하게 정지시켰으며

1957년 6월에는 정전협정의 중요조항인 조선 경내에로의 각종 무기 및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13항 1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끊임없이 횡포하게 유린함으로써 조선에서 무력충돌과 전쟁 재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정전협정의 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조선정전협정에는 정전협정 체결 후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

원래 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UN사령관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에서 다 철수하였다.

지금 남조선에 있는 이른바 UN군이란 사실상 미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1974년 3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실질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고 미국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전쟁도발 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팻쇼」적 탄압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것.

둘째, 쌍방은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 경내로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셋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철거하도록 할것.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망이 없고 이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하는데 참말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의에 응당 호응해 나서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선전이라고 하면서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공고한 평화유지의 근본방도를 밝힌 것이다.

이 평화애호적인 발기는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 ②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하며 군사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지고 조선에서 외세의 간섭이 제거된다면 조선의 북과 남은 민족 내부문제를 평화적인 협상의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3대원칙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성명으로서 또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

의하였다.

남북공동성명으로서 또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공동성명을 준수하는 것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며 외세의 간섭이 제거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는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무력증강을 중지하고 군대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조선에서 평화를 확고히 보장할 뿐 아니라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상호이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여 있는 조건에서는 전쟁의 위험성을 없앨 수 없으며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날게하는 근원을 제거할 수 없다.

오직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풀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만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고 상호 신뢰와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대화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여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과 남사이의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군비를 대폭 축소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는 등 5개항목의 제안을 실현할 것을 거듭 남조선당국자에게 제기하였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는 급속히 해소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결정적 국면이 열릴 것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선

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또한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인적 물적 자원을 민족경제건설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 조선전체인민은 물론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2. 미국측 결의안에 대하여

미국측은 결의안에서 정전협정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동의하는 조건에서 UN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이와 관련하여 군사령관 대신에 남조선군대 장교들로 하여금 정전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UN의 이름으로 미국의 계속적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1)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욱 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제기되자 이 추세를 가로 막아 보려고 결의안에서 마치 UN군사령부라도 해체할 용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UN군사령부도 해체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을 언제까지나 남조선에 그냥 남아 있게 하려는 속셈을 그대로 들어 내 놓고 있다.

미국은 결의안에서 UN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의 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UN군사령부가 해체된다 하여도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실에도 잘 알 수 있다.

UN사령부가 해체된다면 UN군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있는 미군도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계속 미군을 남겨두겠다고 하는 것은 침

략적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외국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킬 것을 예견한 정전협정 제 4 조 제60항을 위반하고 미국이 남조선 당국과 함께 꾸며낸 것으로서 조선인민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침략적이며 비법적인 문건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UN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 수 없게 된 오늘 부당하게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을 가지고 합법화하려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그들의 결의안에서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정전협정의 자기측 서명자를 UN군사령관 대신에 미군장교와 남조선 군대장교로 바꿀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할 것을 노린 것이다.

조선 정전협정의 체결 일방인 UN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정전협정자체로 그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면 몰라도 정전협정을 그대로 두고 그 서명자만을 바꾸자는 것은 애당초 성립조차 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더우기 남조선 당국은 정전협정의 서명자도 아니며 정전협정 자체를 일관하게 반대하여 온 것 만큼 정전협정의 체결 일방으로 될 수 없다.

또한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조건에서 남조선 당국을 정전협정의 일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2) 미국은 그들의 결의안에서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조건부를 내세움으로서 UN군사령부의 해체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꾀하고 있다.

미국측은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처럼 하면서 1976년 1월 1일이라는 날짜까지 설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다.

그들의 진짜 속심은 직접적인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나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대안이니 하면서 시간을 끌어 UN군사령부가 해체되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있다.

(3) 미국은 정전협정의 유지라는 미명밑에 불안정한 조선의 현정전상태를 고착

시키며 두개 조선의 영구분렬을 UN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이루어진지도 벌써 20여년이 된다.

정전상태를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시키고 있는 자체가 정전협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며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미국은 언제까지 이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려는 것인가? 만일 미국이 참으로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데 관심이 있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평화협정을 거절하고 정전상태를 무한정 고착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미국측 결의안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의 체계가 확립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될 것을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 애호 인민들의 염원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조선문제에 관한 UN총회 제28차 회의 결정에도 전적으로 위반되는 기만적인 문건이다.

UN총회 제30차 회의에서의 조선문제 토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두개의 결의안은 누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누가 조선의 통일을 가로 막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결의안이 세계 모든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올해 UN총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조선에서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1975년 8월 17일 평양

[23] 김동조 외무부 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1975. 10. 21)

<전략> 1975년 시초부터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욱 당돌하고 호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수괴인 김일성은 지난 4월 외국방문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며, 얻는 것은 통일이다』라고 기고만장하여 공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기자신에 대한 개인승배에 도취한 자의 언동이며, 전쟁과 폭력에 몰두한 자의 언동인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감돌고 있다는 현실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휴전협정을 보전하는 문제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북한당국은 「평화」나 「평화통일」이니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세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이 위선과 기만과 역설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 2의 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가면뒤에 숨겨진 그들의 저의를 폭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자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자결원칙을 평화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결의안 본문에서 대화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무조건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같은 조치가 그들 주장대로 휴전협정의 종료, 나아가서는 휴전체제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대안을 협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의 보전을 저해함이 없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허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협상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평화를 위한 교섭의 선행조건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

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평화를 성취하는데 전쟁수단에 호소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1975년 8월 17일자 각서에서 북한과 미국만이 휴전협정의 「실제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다 장기적인 조치는 차치하고라도 휴전협정의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자결을 지지한다는 북한이 어떻게 휴전협정 내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제반문제를 단지 북한과 미국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한국인 3분의 2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조치에 대하여 운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의 불가결한 당사자이며, 평화유지의 주당사자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며, 그 이상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대표 여러분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그것은 평화에 대한 북한측의 터무니 없는 모욕적 태도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쌍무적인 협상을 통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실제적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들은 남북대화의 즉각 재개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 결의안에 열거된 「실제적 조치」를 협상하겠다고 하면서 양측의 직접협상을 위한 유일한 통로를 재개할 것을 아직도 거부한다는 것은 위선에 찬 언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그들의 입장은 이러한 자가당착과 뻔한 불성실과 기만으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한국에는 휴전의 파괴와 전쟁의 재발이 초래될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말하는 「통일」이란 평화적 방법으로 두개의 실체로 하여금 자유로운 합의하에 결합시킨다는 자발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침략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향유하는 고유의 주권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유엔헌장의 가장 신성한 원칙중의 하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외군이 철수하였으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도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논리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실을 아는 사람을 누구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필요하다면 북방국경을 바로 건너 주둔하고 있는 외군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어 실제로 그들의 땅에 외군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동란 때 유엔이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2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외군이 북한을 돕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우리나라 국회는 주한미군 철수요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부응하여 모든 미군은 1949년 말까지는 대한미군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무분별하며 잔인한 기록일 것입니다. 즉 그로부터 6개월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침략을 감행함으로써 3년 간에 걸친 쓰라린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적나라한 그리고 불법적인 침략행위는 유엔의 정신을 우롱한 무력행사로서 유엔으로 하여금 사실상 유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한 것입니다. 이성있고 양식있는 사람들과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단합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한반도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조치는 유엔의 역사에 하나의 명예로운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엔이 똑같은 교훈을 두번 다시 배우지 않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이 바로 북방국경선 너머 인접하고 있는 2개의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침략적인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북괴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주권을 계속 행사할 것임을 이 회의장에서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에 직접 연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유엔현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그의 주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의
세간섭도 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본인은 북한측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 둡니
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오산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
의 헌신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단
합되어 있으며, 어떠한 침략에 대하여도 우리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금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께서는 광복절 치사를 통하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통일을 위하여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보다 더욱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 평화적 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
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
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휴전협정을 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전체제는 한반도 평화
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어렵게 이루어진 그리고
불안정하나마 귀중한 이 협정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본인
이 금년 6월 27일 언명한 바 있거니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타방 당사자들
과 회동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유엔군의 철수가 1976
년 1월 1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말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세째로,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을 대치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기
타 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협상을 위한 이러한 건설적 제의를 신중히 고려하고 수락할 것

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궁극적 화해를 위한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남북대화없이 민족자결이니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니 하는 북한의 모든 언동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전쟁의 상처와 우리에게 강요된 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남북한은 한없는 적대와 대결로부터 벗어나 화해의 희망찬 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71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는 1973년 8월 북한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한 주일 전인 지난 10월 13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북한측 공동위원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하여 거듭 조절위원회의 조기 개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우리의 남북대화 조기재개토의를 10월 17일 다시 한번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본인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한 남북간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재개에 어떠한 선행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북한당국이 그 무슨 구실을 내세울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제의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후략>

[24] 북한 이종목 외교부 부부장, 제30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연설

(1975. 10. 27)

의장선생, 대표여러분!

나는 먼저 우리에게 다시 발언할 기회를 준데 대하여 의장선생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조선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이 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대표들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

고 있는 기본장애인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동정을 보내주고 있는 친선적인 모든 나라 대표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표여러분!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의 토의과정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유엔이 조선문제의 토의에 중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무시하고 반제 자주에로 나아가는 오늘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저들의 부당한 입장을 합리화하며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해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해 나섰습니다.

미국대표라는 사람이 미국이 조선의 <평화와 안전을 주시>한다느니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다>느니하는 말을 이 유엔 연단에서 다시 되풀이하였는데 이것은 미국의 양면술책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그 <평화>의 간판밑에 조선에서, 월남과 캄보쟈에서 피비린내 나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도처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파괴와 전복음모를 일삼아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도 말로는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과 작전물자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며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미국대표가 이 회의장에서 조선의 <평화>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는 그 시각에 미 국방부에서는 남조선의 전쟁준비를 돕기 위하여 2억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에프5이> 및 <에프5에프> 최신형전투기 60대와 그 지상설비들, 1억 7천 800만 달러에 달하는 <에프4이>전투기를, 그리고 8천 40만 달러에 달하는 반함유도무기들과 기타 함선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결정하고 그를 상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평화>의 내막입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조선을 영구강점하고 전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측 <결의안>의 본질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더는 지체시킬 수 없는 문제로서 일정에 오르게 되자 어떻게 해서라도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남겨두려는데 있습니다.

미국대표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을 이번 유엔총회에 내놓은 것이 마치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의 그 어떤 <성실성>과 <성의>의 표시로나 되는 듯이 묘사하였습니다.

남의 집에 기여들었던 강도가 쫓겨나는데 거기에 무슨 <성의>에 대하여 운운할 여지가 있습니까?

미국이 이제 와서 그 무슨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세상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국제여론을 속여넘기고 실상은 <유엔군>의 모자를 다른 모자로 바꾸어쓰고 남조선 강점을 계속하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은 300명 정도밖에 안되며 나머지 군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있는 미군으로서 유엔이 관계할 문제가 아니라는 황당무계하고 철면피한 주장을 또다시 들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유엔군>도 <유엔군사령부>자체의 <참모인원>들과 <사령부의 명예위병대>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산하에 군대가 없는 사령부가 어디에 있으며, 있다면 그 사령부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얼마전부터 남조선에 있는 자기들의 군사시설들에서 유엔의 기발을 일부 내리거나 그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미군이 지금까지 유엔의 기발을 들고 <유엔군>으로 행세하여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미국이 이제와서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요 뭐요하는 문제를 들고나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원래 UN의 기발을 자기들의 <성조기>처럼 마음대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행동은 국제연합기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남조선에 있는 4만여명의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아있는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남조선에 <유엔군>과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 따로 있게 되었습니까.

조선정전협정 13항 ㄷ목에는 쌍방은 1대1의 비율로 윤회교체하는 병력외에 그 어떤 군대도 조선에 들여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 남조선에 <유엔군>의 모자를 쓰지 않은 그 어떤 다른 외국군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로 미국자신이 지난날 자기 군대의 남조선강점을 <유엔군>의 간판으로 합리화하여 왔던 것입니다.

대표여러분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바와 같이 이 회의장에서 역대 미국대표자들 자신이 남조선에 있는 모든 무력은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한두 번만 말하지 않았으며 조선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측 수석위원인 미국대표들도 남조선에는 단 한명의 미군도 없으며 오직 유엔 <결의>에 의하여 와있는 <유엔군>만이 있다고 계속 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4만여명의 미군 중에서 <유엔군>이 300명밖에 없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미국대표는 요술을 피우던 나머지 이제는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자신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라고 하고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것이 불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의 파렴치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빠져있는가 하는 것을 날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더는 합법화할 수 없게 된 오늘 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조선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남조선 <정권>과 맺은 비법적인 <조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는 것은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미국은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남겨두고 조선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면서 파렴치하게도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며 남북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실로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한다면 왜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자기 침략군대를 계속 남조선에 남겨두겠다고 하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는데 어째서 남조선당국자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을 이른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에로 부추기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남북공동성명을 지지하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남북공동성명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남북대화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정체상태에 빠진 것이 마치도 우리때문인 것처럼 흑백을 완전히 전도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성사시켜 그것을 통일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북과 남이 <대결>하고 <경쟁>하고 <공존>할 것이 아니라 단결하고 합작하고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

남북대화의 전망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을 배제하는 그 어떤 회담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미 첫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남

조선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에서는 도대체 남조선을 배제한다느니 배제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문제가 설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에 직접 조인하였으며 그 이행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는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사이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정전협정조인에 참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협정조인 자체를 반대하였으며 이 협정의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남조선이 정전협정 처리 문제에 관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실제적 당사자들 사이의 회담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마치도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가 남조선을 배제하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외곡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한 다음에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조선 통일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내부문제로서 미국이나 그 어떤 외세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오직 북과 남사이에 우리 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미국대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평화협정체결이 오랜 기일이 걸릴것을 미리부터 전제로 합니까?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오래동안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는 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장이라도 자기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면 평화협정의 체결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조선에서 진정으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신이 해결하도록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에서 손을 뗄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전협정 유지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조선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불안정한 정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의 분열을 무한정 지속시키려는 속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의 영구분열책동을 합리화할 수 없게 되자 그 무슨 <타협>문제를 들고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장애물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근본문제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근본문제에서 <타협>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남겨두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열의 고통을 계속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하나의 강토 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수천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수백만의 부모형제자매들이 생이별을 당하여 만나기는 고사하고 서로 안부조차 전하지 못하는 쓰라린 고통을 이날이때까지 겪어왔는데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민족적 재난을 계속 당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선인민에게 이러한 민족적 수난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둘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 국경아닌 분계선으로 하여 일시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흐르는 혈육의 정과 통일된 조국에서 살려는 한결같은 염원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궤변과 기만술책으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의 영구분열책동을 합리화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자기 군대를 모두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대표여러분!

조선의 통일문제는 나라의 절반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외래 제국주의자들을 철거시키고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

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한 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외래 침략군대의 강점으로 하여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여러 평화애호나라 대표들에게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5] 박정희 대통령, 일본 마이니찌(毎日) 신문 기자회견

(1975. 11. 13)

문 : 1972년 7월 4일 있는 공동성명에 의해 시작된 남북대화가 정돈상태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지금 남북대화는 확실히 정돈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공산집단이 남북대화에 응해 올 당초부터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의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진지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대화 그 자체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폭동 또는 공산혁명의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 남북대화에 응해 왔던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지금 세계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남침용 지하 땅굴입니다.

그들은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곧 이 지하 땅굴을 휴전선 밑에서 남쪽으로 파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발각되어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자 변명과 부인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북대화가 개시됨에 따라 그들의 대표가 한국을 직접 와보고는 그들

이 생각하던 것과는 한국의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온갖 거짓 선전을 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는 빈곤과 기아 뿐이며, 폭동 직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대한민국내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전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의 동포들에게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를 통해 이같은 허위선전은 필연적으로 그 마각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이 얼마나 괄목할 만한 것인가 하는 사실이 북한동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총련계 우리 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대화를 대한민국에서의 공산혁명의 계기로 이용해 보려던 그들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북한공산집단의 상층부 사정이 남북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혼미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김일성의 사후에 대비하는 정치체제와 권력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금 남북대화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세계의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숭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이것도 김일성의 사후에 필연적으로 닥칠 권력투쟁에서 그가 지명하는 후계자와 그 족벌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내부에서는 김일성의 사후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남북대화 정체의 이유는 북한공산집단이 대한민국과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말로만 평화를 얘기하고 평화통일을 운위하고 있으나,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평화정착과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공존의 거부는 평화의 거부요, 평화의 거부는 평화통일의 거부, 다시 말하면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정체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정체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나는 만남을 무릅쓰고 오직 전쟁재발을 막기위해 북한을 설득해서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못해 가면을 쓴 채 여기에 일단 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가 지금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대화의 전면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UN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휴전당사국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우리의 우방국들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중공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진실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이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과 이유도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북한이 휴전당사국회의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면, 휴전당사국회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이 휴전당사국회의 개최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만나서 얘기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미 발족되어 몇 차례 운영해 본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제의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남북대화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로 기대합니다. <후략>

[26]. 김일성, 일본 「세카이」(世界)지 편집국장과 담화

(1976. 3. 28)

<전략> 다음으로 당신이 질문한 평화협정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지 그 어떤 다른 사람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미제침략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통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와 군사정전 협정을 체결한 것도 역시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당국이 풀어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이 정당한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떻게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가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우리는 이미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는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나가는 조건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이 서로 무장충돌을 방지하고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남북공동성명에 밝혀진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 조국통일을 위한 회담을 계속하자는 것도 제의하였습니다. 절대로 평화협정체결에 따르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취해야 할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데도 미국당국자들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당국자들에게는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이름으로 미국 국회에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할데 대한 편지를 보낸지 2년이 지났으나 미국은 아직 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UN 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조선군사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호소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으나 미제는 UN총회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UN총회결정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직 저들이 말하는 것만 법이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사실로 보아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분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제안을 내놓자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란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불가침조약」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침조약」이란 조선의 북과 남이 두개 나라로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분열을 합법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일시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면 있었지 무엇때문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불가침조약」을 맺어서 분열을 합법화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정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불가침조약」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계속 떠들고 있는데 오늘 조선에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남조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미국을 위협한다고 하여 누가 끈이들겠습니까? 세계인민들은 누구도 그것을 끈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제와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위협한다고 생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미국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평화협정도 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와 대화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문 : 귀국과 미국사이의 교섭에 관한 억측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석각하의 의견을 듣고저합니다.

답 : 우리에게서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당국자들과 끝장을 보아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당국자들과 회담이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의 회담이나 접촉을 어디까지나 평등한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 그들에게 구걸하는 형식으로 하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당국자들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라도 그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당국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협정 체결제의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구태여 그들에게 빌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협정체결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하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당국자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는 데 억지로 회담을 하자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27] 박동진 외무부 장관 성명

(1976. 5. 13)

<전략>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평화정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측이 원한다면, 현 휴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 확정하고 현행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 되어 있는 UN군사령부도 해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협

의를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건설적인 입장은 30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합리적인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남북대화를 1973. 8. 28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한국동란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억제에 기여하여 온 휴전체제를 아무런 대안조치도 없이 파괴하려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을 위한 준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목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개최예정인 비동맹 정상회의와 31차 UN 정기총회를 겨냥하여 북한은 허위선전과 각종 중상모략에 광분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의한 가장 손쉬운 남북상호 불가침협정 체결도 즉각 거부한 북한당국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 당사자로서 5천만 전체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을 갖고 국력이 일진월보하는 대한민국을 외면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소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한국문제를 한민족 스스로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한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대한 정면 거부임을 북한이나 제3국은 똑바로 인식하여야 된다.

북한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5천만 동포의 안전과 행복을 희구하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온 겨레의 숙원인 자유와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원한다면 대안없는 UN군사령부 해체나 대미 평화협정 체결같은 실현불가능한 획책이나 기만적인 국제선전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눈을 안으로 돌려 직접 당사자간 합의를 목표로 하는 대화의 광장에 하루속히 되돌아오는 동시에 남북회담 재개와 휴전협정의 대안모색을 위하여 이미 아축이 제의한 관계 당사자회의 등에 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임을 지적하고 북한측의 반성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제30차 UN총회가 한국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결의 3390(A)에 포함된 아축의 제의는 아직도 유효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믿으며, 당사자간의 건설적인 대화없이 효과적인 해결책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참여나 당사자간의 대화없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연목구어의 망상에 불과하며, 또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반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부언해 둔다.

(1977. 12. 23)

문 :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그것도 또 하나의 「년센스」이다. 남북간에 분단된 민족이 우선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데 대해서 같은 민족인 우리와는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우리는 따돌려 놓고 태평양 건너 미국하고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이며, 또 그건 실현성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국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또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정부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성의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의 새로운 저의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다.

한국을 따돌려 놓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마치 「베트남」 전쟁때 「하노이」가 「사이공」정부를 따돌려 놓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결국은 월남전체를 공산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수법을 노리고 있는 것이며, 소위 「베트남」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자기들 뜻대로 요리해 보자는 저의를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이고, 미국정부도 그러한 북한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대표가 같이 참석하지 않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문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소련, 중공과 한국간의 관계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일본 등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교차승인 방식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일본과 북한간의 금후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휴전협정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유엔군측과 공산측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인데 그 휴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현재 판문점 부근에 와있다. 이것은 유엔에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적인 보장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하한 형태의 국제적 보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여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 합의사항을 보장케 하고 또 이것을 준수하게끔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국제적 보장이란 실효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북간의 어떤 기본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없는 국제적 보장이란 것은 실효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문제 뿐만 아니라 요즈음 중동에서 논란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사이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의 합의하에 공산측에 제안한 제의가 있는데 그것은 휴전 당사자 4자회담을 열자는 것이었다. 휴전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측에서 한국과 미국, 공산측에서 북한과 중공, 4자가 모여 앉아서 남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공산측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런 회담이 설령 개최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노리는 문제는 우선 남북간에 가로놓여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몇가지 합의를 우리가 서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회장께서 말씀하신 「크로스」 승인이라는 것,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교차승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크로스」승인이라든지 교차승인이라든지 하는 용어는 안 썼지만 73년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6·23평화 통일외교정책 선언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구절이 들어 있다.

한국은 호혜평등 원칙하에 공산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대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라. 이것은 6·23선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한가지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나 하면 우리가 문호를 개방할테니까 중공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기타 공산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라는 뜻이다.

만약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어 중공, 소련이 한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그 때에는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에게 문호를 열고 수교하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 때 교차승인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 취지에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이 나간 후에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중에는 이 선언의 취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공산국가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결국 6·23선언으로 북한은 덕을 보고 우리 한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주요 우방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지금 북한과 수교를 안하고 있는 우방들은 호혜평등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산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또는 성급하게 그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지금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이 남한과 국교를 맺고 있으니 북한과도 수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일본이 북한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든지, 수교를 하는 경우 중공, 소련 등이 한국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수교를 하겠다는 전제라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일본만 일방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해버린다면 결국은 북한만 그만큼 지위가 향상되고 우리 한국은 그만큼 입장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우방국가들은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해서 너무 성급한 조치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29] 한미 공동성명 - 공동성명중 관련조항

(1979. 7. 1)

<제10항>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북한당국과의 생산적인 대화 재개를 위하여 1979년 1월 19일자 제의를 비롯한 한국정부의 최근 노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박대통령에게 확약하고,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제11항>

한반도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회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대화의 촉진과 긴장완화를 위한 명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결의의 증거로서 박대통령과 「카터」대통령은 대화의 촉진과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의 고위당국대표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로 공동 결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고 또한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양국 대통령은 한국 외무부장관 및 미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 외상에게 이 뜻을 공동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2항>

양국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

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박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에 직접 발표한 정책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한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구하고 있음에 유의하였다.

〈제13항〉

「카터」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카터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주요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지도 않고 평화를 증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유념하였다.

〈제14항〉

양국대통령은 궁극적인 통일에 앞선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공히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남·북한 양 당국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30]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1979. 7. 10)

보도에 의하면 7월 1일 서울에서는 남조선에 찾아 들었던 미국 대통령 카터와 남조선 당국자들 사이에 진행된 모의끝에 이른바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에 의하면 카터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이미 자기가 한 공약과는 배치되게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계속 유지하며 남조선에 군사력 증강을 앞으로 지원해 줄데 대하여 확약하였으며 지어 미국의 핵우산으로 남조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조선 UN 동시가입과 조선의 북과 남에 대한 교차승인문제를 들고 나와 2개 조선으로 조선의 분렬상태를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저들의 음흉한 기도를 되풀이 하였으며 카터는 악명높은 인권유

린지대로서 세계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남조선에서 마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듯이 묘사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을 공공연히 비호하였다.

모든 사실은 카터의 이번 남조선 행각이 그가 표방한 것과 같은 평화의 행각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을 고취하는 위선자의 화약 냄새 풍기는 행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카터가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전연지대의 미군부대부터 찾아가 하루밤을 지내면서 전투준비태세를 살피고 힘의 교리를 설교한 사실에서 만도 남김없이 실증되었다.

공동성명에서 카터가 남조선 당국자와 더불어 있지도 않은 남조선의 군사력 증강과 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고도의 힘과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느니 남조선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느니 남조선의 무력현대화 계획의 성과적 이행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떠든 것은 다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하고 전쟁열의를 북돋운 것이며 평화의 전망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이다.

카터의 이번 남조선 행각의 전 행정은 미국 지배층이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 군사기지로 틀어 쥐려는 야심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이에 앞서 있는 카터의 일본행각 결과와 결부하여 볼때 그의 남조선 행각은 아시아침략의 기본 전략으로서 미국이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 일, 한 군사 일체화를 다그치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성명은 결국 카터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겠다고 한 공약과 그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인권옹호공약이 다 기만전술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조선에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고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렬을 꾀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심을 남김없이 들어 내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대한 위협적으로 엮어진 분렬과 전쟁정책을 고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가리우고 조선문제 해결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해 보려고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그 무슨 고위 당국대표들의 회의라는 것을 소집할데 대한 공동제의를 내놓았다. 그들은 이 제의가 그 어떤 새로운 외교적 발기나 되는듯이 떠들

어 대면서 제3국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것을 통보해 왔다.

공동성명에서는 대화를 촉진시키며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방도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회의소집을 제의한다고 하였다.

미 국무장관 밴스의 성명에 의하면 이 3당국회의의 성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이 지역의 긴장완화, 그리고 궁극적인 조선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조선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자는데 있다고 하였다.

남조선 당국자들도 3당국회의에서는 긴장완화와 평화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3당국회의라는 것이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탕된 제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한편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3당국회의에서 이 2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섞어 놓고 토의하자는 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무엇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끼어 들겠는가.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미국이 여기에 끼어 드는것은 내정간섭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의 조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다만 우리와 미국사이에 우선 토의를 진행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들의 참가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그들이 제기한 3당국회의에 관한 제의는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제의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동성명에서 조선의 영구분렬을 정책으로 선포한 박○○의 6·23 특별성명을 지지하고 조선의 북과 남에 대한 주요 동맹국들이 교차승인과 남북 조선 UN동시가입을 떠벌인데서도 명백히 들어났다.

카터는 공동성명에서 북조선의 주요 동맹국들이 남조선과의 관계를 확대할 용의를 가진다면 미국도 북조선에 대하여 동일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남북조선 UN동시가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곧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예속정권인 현 남조선 당국을 어떻게 하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분렬을 고정화하고 2개조선 조작음모를 실현해 나가려는 음흉한 술책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2개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자 하면서 그 무슨 통일을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모순되는 것이다.

오늘 문제는 미국이나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진심으로 협상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2개조선을 위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통일을 하지 않고 분렬을 영구화 할 바에야 회담을 해서 무엇하겠는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 정말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2개조선으로 갈라 놓으려는 그릇된 입장부터 버리고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올바른 자세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될때 진정한 대화의 길은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의연히 남조선당국자들,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일관하게 반대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는 미국 사람들과 함께 참가한 가운데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논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길지 모르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하여 여기는 우리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나라의 통일문제와 같은 중대한 민족내부문제를 외국 상전의 농간에 내 맡기려는 반민족적 책동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북과 남의 대화의 마당으로 성실하게 나와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한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및 해외동포조직대표들 사이에 아무때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회담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이 조선에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항구한 평화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와 회담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직접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때까지 미국 당국자들은 남조선의 참가없이는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여 왔다.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읍져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그 어떠한 침략적 야망도 가지지 않으며 진정으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 선다면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지 못할 이유와 구실이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와의 대화에 응해 나오지 못할 조건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와의 회담해 응해 나온다면 그때에는 미군철거후 제기되는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혜의 원칙에서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세계는 과연 누가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누가 전쟁과 분렬의 범죄적 길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공명정대한 입장이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나라들과 인민들의 더욱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1979년 7월 10일 평양

[31] 북한 이종욱 정무원 총리, 제6차 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연설

(1979. 9. 6)

〈전략〉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최근 들고 나온 이른바 「3당국회의」라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입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3당국회의」에서 이 두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뒤섞어놓고 토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어 할 일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내정에 대한 간섭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조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참가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제기한 「3당국회의」에 관한 「제의」는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우기 카터가 남조선에 왔다 가서 「철군」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그의 「3당국회의」 제안이라는 것이 조선에 대한 분열과 전쟁정책을 가리우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외교적술책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미국이 조선문제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와의 회담에 응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의 참가없이는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읍써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후략>

[32]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서울당국에 보내는 편지

(1984. 1. 10)

우리는 1월 10일 현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편지를 서울당국에 보낸다.

조국이 분열된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되어가며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도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민족의 념원과 배치되게 긴장상태가 어느때 보다도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가슴아프게도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어 남쪽땅은 핵전초기지로까지 전변되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이 엄중한 사태발전을 누구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하며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난국타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포를 걸어 놓는 총칼을 맞대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저히 대화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

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북과 남사이에 대화에서는 이미 쌍방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민족앞에 그 이행을 확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이 각각 자치체를 실시하는 중립적인 연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울당국에 통일국가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서장으로 될 3자회담이 하루빨리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울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양

[33]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상 · 하 양원)에 보내는 편지

(1984. 1.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이 편
지를 미합중국정부와 국회 상, 하 양원에 보낸다.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벌써 서른해가 지났으나 평화의 전망은 갈수록 어
두워지고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침예한 국면으로 더욱더 다가 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는 가운
데 남쪽에서는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현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터
질 수 있을만큼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
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다음 일관하게 미국과
의 적대적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여러모로 탐구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미 197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직접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동족상잔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쌍방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호상불신과 반목만을 조성하고 전쟁위험을 더욱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 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핵전쟁의 길로 계속 달음박질해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돌아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결상태를 지속시켜서는 당신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다같이 격폐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선반도에 엄중하게 조성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인정한다.

출로는 오직 대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사이의 대화에 있다고 우리는 깊이 믿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판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상태가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본다.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불가침 선언에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쌍방의 군대를 축감할 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열고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남의 현존 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과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화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때에 조선반도에서 항구하고 공정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담보들이 믿음직하게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고 위성국으로

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정치군사적동맹이나 빨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엄정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된 외국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과 이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영예롭게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이미 한번 전쟁을 하였다. 우리 두 나라가 한번 싸웠다고 하여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다시 전쟁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의는 변화된 현정세에서 가장 시기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현실적 절박성을 보나 조선문제를 언제까지나 미해결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양

(1984. 1. 11)

〈전략〉 북한당국은 「버마」암살 폭발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1983년 10월 8일 이른바 「3자회담」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날인 1983년 12월 3일에도 이를 또 주장하였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이른바 「3자회담」을 공개 제의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이 천인공노할 「버마」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시인·사과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실한 대화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고 민족 화합의 터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전 인류가 분노한 「버마」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를 시인·사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대화를 갖고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책임있는 남북한당국 각료급회담이라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해소와 군비경쟁 중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이러한 남북대화에서 협의·결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1984. 2. 10)

〈전략〉 귀측 당국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국내외에서 민족자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평화의지와 통일염원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버마」암살폭발사건은 남북한 관계를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 까지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귀측 당국이 「버마」사건에 대한 솔직한 시인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른바 3자회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습니다.

귀측 당국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버마」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귀측의 회담 제의를 진실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자결원칙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성된 내외 정세속에서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불신과 반목 그리고 긴장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길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트고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남북한 이산가족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상호 왕래할 수 있는 길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측이 주장해온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과 「각료급 회담」등 일련의 제의들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문제와 장래문제를 상호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

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귀측이 올바른 자세로 남북한간의 직접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후략>

[36] 북한 강성산 정무원 총리, 대한민국 진의종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편지

(1984. 3. 7)

진의종 국무총리 앞

나는 귀하의 2월 10일부 회답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3자회담제의를 응당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였었는데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귀측이 그것을 외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3자회담제위는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들과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우에서 조선문제에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기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하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남북의 군대를 대폭 축소하며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귀측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와 미국, 남조선당국이 다같이 참가하는 조건에서만 포괄적으로 완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실권자가 미국이며 또 남

조선당국 역시 조선에서의 현 긴장상태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아무런 타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우리의 3자회담제안을 반대하고 남북쌍방회담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남북쌍방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하게 주장해온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이 자유적인 입장에서 서로 만나 심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격해졌던 감정도 풀고 호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여 왔으며 또 실지로 이러한 대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3자회담제약에서는 남북쌍방회담을 배제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3자회담에서 조선통일을 위한 전제가 마련된 다음에는 북과 남의 당사자들 사이에 통일대화를 진행할 것을 명백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첨예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자주적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남북쌍방회담 이견 3자회담이건 회담형식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 과연 북과 남의 쌍방회담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귀측이 독자적으로 우리와 만나 이 문제들을 토의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문시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사령관이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미국의 승인이 없이 남조선당국 혼자서 우리와 마주 앉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꾸미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며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대를 축소하며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남조선당국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아무리 우리가 귀측과 만나 회담을 하여도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으리라는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에 진행된 남북대화의 경험에서도 그대로 실증된 사실입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미국으로부터 <국군>에 대한 통수권도 넘겨 받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전권을 넘겨받는다면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쌍방회담을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직접 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1974년이래 조미회담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거듭 제기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조미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기한데 대하여 미국측은 처음부터 남조선당국이 같이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귀측도 미국이 3자회담안을 제기하였을 때에 그것을 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난날의 엄연한 사실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와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하여 새로이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문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책임으로 보나 자신들이 이때까지 주장해온 것으로 보나 3자회담을 반대할 아무런 근거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 3자회담문제를 들고나왔을 때에는 그에 동의해온 귀측이 오늘에 와서 무슨 이유로 우리의 3자회담제의를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귀측에서는 3자회담을 하면 결국 우리와 미국이 주인격이 되고 남조선 당국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손님격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귀측이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은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회답편지에서는 남북쌍방회담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귀측이 지금처럼 미국을 남조선에 계속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을 미국에 의거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측이 조선문제에 관계되는 나라들의 회담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이외에 조선문제에 직접 책임있는 나라가 없는 것만큼 그것은 더욱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실에 비추어보아 우리는 현시점에서 3자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조선에서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그것이 실현될 날을 인내성있게 기다릴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강성산

1984년 3월 7일

[3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미국 국회(상·하원)에 보내는 편지

(1988. 7. 20)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35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체약쌍방은 3개월안으로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서약하였으나 우리와 미국은 그사이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협의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반목과 대결로 해들을 넘겨왔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이토록 오랜세월 지속되어온 실례는 일찌기 역사에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정전후 지난 35년동안 조선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다시 전쟁이 터져 국토가 폐허로되고 민족이 참화를 겪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우리는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우리는 이미 14년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회담을 가지고 조선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984년 1월에는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자회담을 열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의한 조·미회담이나 3자회담이 열리어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었더라면 이미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가 도래했을 것이며 우리와 미국은 오늘과 같은 적대관계를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은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국당국은 조·미회담에서 앞서 남북 당사자간회담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까지도 우리와의 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는 북남사이에 회담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측의 노력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남사이의 회담들은 시작되자마자 중단과 재개와 결렬의 우여곡절을 겪지않으면 안되었으며 어느회담도 우리 민족앞에 결실을 가져다주지 못하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두고 상대방을 반대하여 칼을 버리며 대포질을 하는 형편에서는 북과 남이 마주 앉아도 흠어진 가족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가장 초보적인 인도적 문제 하나도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진행하여 온 북남대화의 총화입니다.

이 총화는 무엇보다 우리와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이 없이는 남북 당사자간 대화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군축도하고 관계도 개선하면서 미국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않는 우리와만 군축도 하지않고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며 긴장의 격화는 곧 전쟁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제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좋을 것이 없고 미국도 무사할 수 없으며 남조선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피해자로 될것이 아니라 다같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길을 택해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우리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서로 칼을 버리고 대포를 쏘는 일을 적게하거나 완전히 그만두기 위한 평화적 협상을 가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난날에 싸웠다고 하여 지금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오늘 적대관계에 있다고하여 내일 그것을 바꾸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조선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의 책임 있는 우리와 미국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미합중국 국회대표들사이에 회담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조·미국회 대표들사이에 회담을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미당국자들사이에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하나의 효과적인 방도로 될 수 있습니다.

조·미국회 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서 쌍방 국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 회담들에서는 그밖에 조·미관계를 개선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서 호상 관심사로되는 제반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쌍방 국회회담 대표단은 부의장급을 단장으로하여 7~9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들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사전에 회담준비와 관련한 실무적인 접촉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장소로는 평양도 좋고 뉴욕도 좋으며 제3국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회담시일은 문제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국회 회담이 열리고 여기에서 상정된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협의·해결되면 쌍방 당국자들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워주게 될 것이며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조·미국회 회담의 실현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대화를 추진시키는데도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 국회가 우리의 제의를 신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인 회담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38] 노태우 대통령, 제 43 차 유엔총회 연설

(1988. 10. 18)

<전략>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답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답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 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심화되어온 많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데까지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후략>

[39] 노태우 대통령, 제45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0. 8. 15)

<전략>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군사대결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상호신뢰에 바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제한없이 북한과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간의 무력사용 포기선언과 불가침협정의 체결, 현재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서울과 평양에 상호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대결을 지양하여 민족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군비통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음날 열기로 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대화가 진전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략>

[40]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강영훈 총리 기조발언

(1990. 9. 5)

<전략> 나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남북의 쌍방 당국을 대표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며 존중한다.
2. 남과 북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며 상대방 내정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3.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5. 남과 북은 자유로운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방하며 민족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7.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중략>

다음으로 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가 심화되어 온 것은 이념적 대결,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오랜 단절에서 온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같은 불신은 남북간의 정치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더욱 가열화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구축을 통해 상호간에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제안하고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나는 8개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우리측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정치적 신뢰구축

1.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 비방·

- 중상, 전단살포 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일체 중지한다.
2.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상호 개방한다.
 3.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4. 군인사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5. 군사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교환한다.
6. 특정규모 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참관케 한다.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해 45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7.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 전화를 즉각 설치·운영한다.
8.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며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쌍방은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간의 군비감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1.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의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군사력을 공격형으로 편성하고, 전개해 둔 채로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전력부터 먼저 감축해 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래야만 기습공격 또는 전면공격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의 군사력이 많고 다른 한편의 군사력이 적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전쟁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상호 동등수준으로 되었을 때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나가되,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전전력과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4. 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5.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간에 군비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체계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남북한과 한반도 관련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평화보장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후략>

[41]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연형묵 총리 기초발언

(1990. 9. 5)

<전략> 다음으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북남신뢰조성

-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 (1)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2) 사단급 이상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3)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4)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5)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1)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 (2)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을 해체한다.
 - (3)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 3) 북과 남은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1)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2)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 북남무력축감

-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1)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 한다.
 - (3) 정규무력축감의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개신을 중지한다.
 - (1) 새로운 군사기술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 (1)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 (2)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 정형을 검증한다.

▲ 외국무력의 철수

-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 (1) 남조선에 배비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2)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철수되도록 한다.
 - (2)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 (2)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성이 제거되고

북과 남사이의 불신도 해소될 것이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상과 같은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대결관계와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북남, 조미 관계를 새로운 기초우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이 채택할 불가침선언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데 대하여 약속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가침선언의 구성요소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첫째, 상대방을 반대하여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둘째,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문제

셋째, 불가침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문제

넷째,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과 무력간섭에 가담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

다섯째,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북과 남의 무력축감과 미군철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군사적 대책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서로의 안전은 믿음직하게 담보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평화는 더 확고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새로운 계기점으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략>

[42] 노태우 대통령, 제 46 차 유엔총회 연설

(1991. 9. 24)

<전략> 의장,

나는 제 43 차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

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온 모든 고난이 이 땅을 짓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호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UN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40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감시단을

상호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천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UN동시가입으로 새로와진 상황 속에서 내달 열릴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략>

[4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 기조연설

(1991. 12. 11)

<전략> 북측대표 여러분!

쌍방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중요사항들은 우리가 합의서 내용을 타결하고 이에 서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쌍방간에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요사항들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근 40년간 지속해온 불안한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남북간의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하는 문제는 반드시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남북당사자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전쟁을 한 것도 같은 민족인 남과 북입니다. 총칼을 놓고 전쟁을 멈춘 것도 남과 북입니다. 이땅에 튼튼한 평화를 다져 나가야 하는 것도 남과 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현재의 불안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의 뜻을 같이하면서도 남북간에 할일이 따로 있고, 미국과 할일이 따로 있다는 등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귀측이 한반도 평화문제해결의 엄연한 당사자인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평화문제든 통일문제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안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일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남북간에 의견대립과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공동의 준거를 마련해 두자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공동의 준거가 없다면 상호 불가침에 관한 약속은 물론 합의서 자체의 실효성을 보

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국제연합헌장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그 목적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적 해결의 구체적인 수단까지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국제연합헌장을 준수할 것을 수락하고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된 만큼 국제연합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수단을 남북 쌍방간 분쟁문제해결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 쌍방이 앞으로 채택하게 될 합의서의 이행에 따르는 제반 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권위와 권능이 인정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을 그 준거로 삼자는데 대해 귀측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가침의 이행보장조치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불가침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위해서도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초보적이고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합의서에 명기되어야 함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지난 40여년간 남북간에 쌓여온 높은 불신의 장벽을 생각할 때 즉시적이고 일괄적인 군축은 비현실적이며, 남과 북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축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군사적 신뢰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신뢰구축이 없이 군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전례는 없습니다. 신뢰구축은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귀측이 불가침 이행보장조치들을 합의서에 명기하지 않고 군사분과위원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귀측의 군축에 대한 실천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귀측이 남북간에 튼튼한 불가침과 군비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합의를 이룩하는데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략>

(1991. 12. 11)

〈전략〉 첫째로 귀측 합의서초안의 제5조에 있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그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자는 문제입니다.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킨다는것은 법적견지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북남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법적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바꾼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북남사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우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귀측과 합의해결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나라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와 귀측과의 관계뿐만아니라 그에 직접 책임이 있는 미국과의 관련문제가 응당 고려되어야하며 그중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계약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나라의 평화문제해결에서 남과 북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그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지금도 미국의 군사적피보호자로 남아있을 것을 요구하고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한것으로 접수될수없는것이며 귀측이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한 귀측과의 평화협정이란 성립될수도 없고 성립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협정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후략〉

(1992. 8. 28)

〈전략〉 셋째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간의 이 「특수관계」는 그러한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남북의 두 정치실체, 즉 남의 대한민국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남북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의 체제(제도)를 인정·존중하고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되 그때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을 하지않고 모든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또한 전문에서 남북 쌍방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등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합의사항들은 남북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특수관계」가 하나의 과도적인 「평화공존관계」임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형성되는 남북간의 「특수관계」는 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간에는 각기 상대방의 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민족내부관계가 존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가 존재하는 2중의 관계인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남북관계의 두 주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민족의 이익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만드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이에 관한 의견차이의 소지를 배제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준수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같은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왜곡·변질시키거나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부속합의서는 결코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의 진행경과를 보면 귀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사항들에 관한 합의내용을 왜곡하여 그릇되게 해석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부속합의서를 이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개작·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남북관계가 분단된 남북의 두 정치실체,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측은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의서의 두 합의주체에 관한 표현인 「남」과 「북」그리고 「상대방」의 실체를 애매하게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된 남북 쌍방의 국호가 「달리 호칭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남」과 「북」이라는 표기가 「지역개념에 불과하다」는 궤변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귀측은 합의서의 편의상 표현인 「남」과 「북」이 엄연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측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당사자 자격마저 시비하는 터무니 없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한반도의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부속합의서에 담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측은 6·25전쟁을 귀측과 미국간의 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귀측이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6·25전쟁은 분단된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이고 그 당사자는 남북쌍방인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발생한 무력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해 미군은 다시 한반도로 돌아 왔습니다.

미군만 온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밖의 15개 유엔회원국도 한반도로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무력침략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주러 온 것이지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귀측은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었고 1953년의 휴전협정이 미군 장성에 의해 서명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 할지라도 유엔군은 유엔군이요 미군이 아닙니다.

미군 장성인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요 미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에는 한국군 뿐 아니라 그밖의 참전 15개국 군대중 다른 어느나라 군대도 별도로 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휴전협정은 현지 최고 야전지휘관간에 체결된 전지협정이요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귀측은 휴전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는 사실을 트집잡아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사령관을 미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온 집단안보 개념의 구현이지 우리의 주권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의 사령관이 소련군 장성이었다는 사실이

나 나토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들 문제에 관한 귀측의 입장은 부속합의서를 이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변질시켜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귀측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과 우리측의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 등 내외정세의 흐름과도 완전히 배치될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사실상 포기했던 「하나의 조선」이라는 왜곡된 한반도 상황논리를 부속합의서를 통해 되살려 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남북간에 화해·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나의 한국」은 우리의 목표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분단되어 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해야지 「하나의 조선」이라는 가공적인 허구로 부터 출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북쌍방이 합의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담아 놓은 기본원칙이며 기본정신입니다.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준수하려면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존정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만 부속합의서 협상도 원만히 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회의에서는 귀측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부속합의서 문제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측의 새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중 략>

제6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21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현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가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현 군사정전협정 체제를 변경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즉각 정상화한다.
- ③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 활동이 보장되도록 한다. <후략>

[46]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북측 백남준 위원장 기본발언

(1992. 8. 28)

<전략> 우리는 부속합의서작성에서 제3국이나 타조약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존엄과 화해를 쫓먹는 일체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민족적대단결과 나라의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들고나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따져보면 외세의존적립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귀측은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로부터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로서 귀측은 여기에 끼여들 하등의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남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고 하여 평화협정 당사자가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귀측은 우리와 정전협정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닐뿐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

를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정전협정 제61항에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귀측이 굳이 정전협정체약당사자의 계승자로 될 의사가 있다면 조미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정에 대한 필요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며 정전협정이 수정보충되지도 않았고 군사통수권을 틀어쥔 미군이 아직 남조선에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귀측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당사자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귀측은 그 부당성과 비법성이 입증된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더이상 고집하지 말고 무조건 그것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외세와 함께 매일같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도 외세의존정책의 직접적 산물입니다.

귀측은 지난 19일부터 미국과 함께 동족이며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이 훈련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에는 주로 도상훈련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며 그것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 당국은 올해에 미국본토의 미군과 남조선주둔 미군부대뿐 아니라 미국의 「에프-117스텔스」 전투폭격기, 「패트리오트」 미사일 등 최신식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어 이 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또다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야외기동훈련을 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측이 북남합의서를 리행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 것보다 외세와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에 더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연한 증거입니다.

귀측은 이제부터라도 외세의존적이며 사대주의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략>

(1993. 10. 5)

〈전략〉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더는 지체할수 없는 긴박한 문제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우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선정전협정은 낡았으며 정전기구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도 지난날의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의 정전상태와 정전체계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우리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인 정책과 의지의 결과이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북남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유엔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낮은 돌리지않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여달리려 하는것은 조선문제해결에 장애만을 조성할뿐이다.

유엔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선차적이고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하며 정전체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에서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유엔이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 3390비대로 남조선에서 〈유엔 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

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협상이 하루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략>

[48] 북한 외교부 성명

(1994. 4. 28)

최근 조선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불법행위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조·미관계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전망이 보이던 제3단계 조미회담을 결렬시켜 놓고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 여론의 일치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은 패트리엇트 신형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4월말까지는 실전 배비하며 올해 11월에는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94합동군사연습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에 아파치직승기 대대를 증강한 미국은 앞으로 한 개 여단급의 각종 전투장비들을 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 집중된 미국이 해상무력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와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외부로부터 작전물자반입과 무력증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그때부터 벌써 일방적으로 협정의 합의서한들을 파기해 버렸으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을 끌어들이었다.

지난시기 미국은 그래도 조선정전협정이 두려워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밀리에 끌어들이었으나 오늘에 와서는 신형미사일들과 전투기술장비들을 백주에 공공연히 반입 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40여년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지 협정의 합의서한들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기구마저 마비시켰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미국은 자기들의 협정위반 행위가 중립국 시찰 소조에 의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에 정전협정 제2조 3항에 따라 조직된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를 자기측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철수시켰으며 1991년 3월에는 정전협정에 비추어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때까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기해 온 것으로 보나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심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을 압살해 보려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도 마음대로 격화시켜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그것을 막는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가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을 막는데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살 정책을 가리우는데 이용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협정과 기구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응당하다.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정책과 의지의 결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 쌍방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1950년대 정전상태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제안에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1994년 4월 28일 평 양

[49] 외무부 당국자 논평 - 북한의 한반도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대미 협상제의 관련

(1994. 4. 29)

- 현재의 한반도의 긴장 및 불안정 요인은 북한의 핵의혹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북한은 현 단계에서 문제의 쟁점을 흐리게 하지 말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남북한은 이미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다. 북측이 제기한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수립” 문제는 당연히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로서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1장(남북화해) 5조 :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

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50] 북한 외교부 비망록(비공식 번역)

(1994. 4. 30)

한반도에 총성이 멎고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41년째 접어들고 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확실한 상태가 40년간 정전체제로 이어져오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전쟁위험성 또한 증가되어 왔다.

최근 몇달간만 보더라도 미국은 패트리어드 미사일 등 최신에 군사장비들을 남한내에 반입시켰으며, 초대형의 비행기 수송용 함대들과 북한해역 주위에 다량의 전함들을 배치시키는 한편 한국과 일련의 합동 전쟁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반도에는 어느때라도 핵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작금의 사태발전은 전쟁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효율적이고도 명백한 조치들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3. 7. 27에 조인된 정전협정은 두 교전당사자가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상정한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했다.

정전협정 제 4 조 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로 밝히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전상태를 공고

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

한국문제 관련 정치회의를 다루기 위해 1953년 10월 판문점에서 시작된 정전협정의 두 서명당사자간 회담에서, 북한정부는 동 정치회의 참가당사자들에 대한 분류, 의사일정, 또한 보도자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제안을 하였으며, 동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러나 판문점 회담은 1953. 12. 12 제23차 접촉시 미국측이 불합리한 주장을 되풀이 고집함으로써 결렬되었다.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의 외무장관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정부의 끈기있는 노력 덕분이였다.

동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정부가 전 한반도내 민주선거를 통해 수립되어야하며 한국내 모든 외국무력은 그로부터 6개월이내에 철수해야 한다고 제의했으며, 동 제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논리에 맞지 않게 「선거」는 남한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북한의 교전당사자인 유엔의 감시하에 행해져야 하며, 미군은 「통일한국」 정부가 수립될때까지 철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제네바회의의 일방적인 중지선언을 하였으며 결국 이를 결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서명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정부는 성실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956년 8만여 병력을 제대시켰으며, 1958년에는 중국정부의 동의하에 중국 의용군들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남한 당국은 노력을 기울여 진행되던 남북고위당국회담을 결렬시켰으며, 「두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배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4년 3월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논의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양자 회담을 제의했으며, 더 나아가서 미 의회에 대미평화협정 초안을 채택, 보내기도 하였다.

북한의 제안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유엔 결의안을 놓고 보아도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제30차 유엔정기총회에서는 1975년 11월 남한에

대한 「유엔 권고안」의 소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내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강력한 국제여론의 압력에 의해 미국은 동 결의안 초안에 담긴 대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해 직접적인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모을 필요성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 미국은 기 제안된 북·미간 양자회담 대신 남·북·미간 3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과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1984년 1월, 기 제안된 미·북 양자회담에 동등한 자격으로 남한 당국을 포함하여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획기적으로 공식제의하였다.

동 3자회담에서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는 것이었다.

1993년 10월 유엔 정기총회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유엔 권고안」을 해제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킬 새로운 결정을 내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간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금년 4월 28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북한정부는 현 정전체제로는 더 이상 한반도의 무력증강이나 군사적 위협, 혹은 전쟁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측에 양국이 협상을 갖고 실질적인 토대위에 신뢰할 수 있는 평화보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북한의 정당한 제안을 수락하기는 커녕, 미국은 계속해서 단계적인 무력증강과 빈번한 대규모의 군사연습 실시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II. 정전협정과 정전기구의 기능은 마비되었으며 쓸모없는 장치로 변했다.

정전협정의 실질당사자인 미국은 근 40년 넘게 정전협정을 위반해왔다.

1953. 7. 27 정전협정에 조인했으면서도 미국은 같은해 10월에 남한당국과 「한·

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남한내 미군무력의 존재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로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1955. 11. 7 미국측은 중감위가 정규시찰 목적으로 김포비행장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 총격을 가해 추락시킴으로써 3명의 폴란드 위원을 사망시켰다.

1956. 6. 9 미국은 정전협정 제2장 제3절에 의거 주재하던 공산측 중감위 시찰소조를 유엔사령부 관할구역내 지정입구로부터 철수시켰는데, 그 이유는 동 시찰소조가 미국측의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염탐,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그때로부터 중감위는 정전협정에 따라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 시찰소조의 축출에 이어 1957. 6. 21 미국측은 한국내로 증강되는 작전물자 반입을 배제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13조 ㄴ)목의 일방적 불이행을 선언했다.

정전협정 제13조 ㄴ)목은 적대일방은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이러한 법적·행정적 토대위에 한국내에 마음대로 무력증강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그로부터 한국내에 아무 제한없이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거대한 양의 정밀무기들을 반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USS 푸에블로호 사건」, 「EC-121 정찰비행기 사건」, 그리고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고 감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판문점 사건」등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1991. 3. 25 미국은 정전협정상 법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명백히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위 유엔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일방적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군사정전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공연한 배반행위이며 정전협정의 타서명국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군사정전위의 공산측 수석대표를 소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측의 무책임한 행위는 전쟁재발방지에 필수불가결한 정전협정을 무효화시켰을 뿐 아니라 정전기구들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결과적으로 군사정전위는 유명무실해 졌으며,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전락하였다.

냉전시대 정책의 산물로 판명된 공허한 정전기구는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Ⅲ. 정전상태는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이행의무와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장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유지되어 왔다. 즉,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화해체제로 바뀌지 못함으로써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로서의 동 협정의 실질당사자- 관계를 이룩해 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미·북간 적대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전형적 유산인 정전협정체제를 종결짓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른바 「남침」위협이니 또는 「북침」위협이니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며 미·북간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없애고 화해와 상호신뢰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존 정전협정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기능마비상태인 정전기구들을 소생시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고려해 줄 것을 이미 수차례 미국측에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뢰성있는 제안과 발기들에 대해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후기 냉전시대에서 조차 정전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냉전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의도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평화와 안정 대신에 대결과 전쟁으로 나가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북·미간 오랜 적대관계는 한반도에 핵문제를 포함한 결정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노력은 난국에 처해 있다.

만일 북·미 양국이 오래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룩했다라면 결코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만일의 경우 문제들이 발

생했더라도 상호 신뢰분위기속에서 어려움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 역시 북·미간 전반적인 관계의 견지에서 일괄접근(package approach)할 때에 비로서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한반도의 현 상황은 정전체제를 하루속히 종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 한번 전쟁을 치루었다는 이유로 북·미간에 적대국가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1963년 6월 제 1 차 북·미 고위급접촉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불가침의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이것은 양국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로 된다.

이것을 계기로 본다면 미국이 정전상태를 종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개선을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는 현재 없다.

정전상태를 끝내는 데는 몇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인 관례들 중의 하나는 교전당사자가 교전상태를 종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종료시기에 형성되었던 적대관계를 청산한 국가들의 실례는 많다. 예를들면 이집트와 파키스탄은 1951년에 독일과의 교전상태의 종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구 소련은 1955년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의 결의를 통해 독일과의 교전상태의 종결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평화보장체제(a new peace arrangement)를 위해 정전상태를 종결하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계속 응답을 해오지 않을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의 일방서명국으로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50-1]

AIDE-MEMOIR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New Peace Arran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substitute for the Armistice Arran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Pyongyang, April 30, 1994

It is going to be forty-one years since guns ceased roar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While an uncertain no-peace, no-war situation has lasted for four decades in the cease-fire setting, tensions in Korea have persisted unabated and the danger of war has snowballed with the passage of days.

In recent months alone, the United States has shipped its up-to-date military hardware including "Patriot" missile batteries into south Korea, massively deployed its supercolossal aircraft carriers and a number of other warships around the wat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other hand, conducted joint war manoeuvres one after another along with south Korea. These moves have led to a touch-and-go situation today in which a nuclear war might break out at any mo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developments highlight an urgent need for effective and decisive steps to be taken to obviate the danger of war and establish a new security arrangement in Korea.

I.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Worked Hard to Convert the Cease-fire Arrangement into a Durable Peac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is simply a provisional arrangement that presupposes a follow-up process in which the two belligerent sides should disengage themselves from military actions and should work to replace the truce with a peace agreement.

Paragraph 60 of Article IV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rovides that: "In order to insure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the military Commanders of both sides hereby recomme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concerned on both sides that, within three (3) mon

the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a political conference of a higher level of both sides be held by representatives appointed respectively to settle through negotiation the questions of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forces from Korea, the peaceful settlement of the Korean question, etc.”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done all it could to the best of abilitie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onvert the cease-fire arrangement into a durable peace.

At the talks between the two signator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began in October 1953 in Panmunjom to deal with a Korean political conferenc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ll-inclusive proposals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participants, agenda items and even a press release of the conference, and made patient efforts to bring about the conference. The talks, however, were broken off on December 12, 1953 when the United States walked out of the 23rd round of talks after persistently repeating its own unreasonable assertions.

It was thanks to the persevering efforts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he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from the countries concerned with a peaceful coordination of the Korean question took place in April of 1954 in Geneva.

At this conferenc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posed that a unified government be established through all-Korea democratic elections and all the foreign forces be withdrawn from Korea within six months thereafter, and did its level best to bring about a consensus on this proposal.

The United States, however, insisted illogically that “elections” should be held in accordance with south Korea’s “Constitutional procedures” and in the presense of United Nations, a belligerent party vis-a-v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US troops should not with-

draw until a government of "unified Korea" is established. Later, the United States issued a unilateral declaration on suspending the Geneva conference and wrecked the conference eventually.

The sincere efforts by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d afterwards, though, to fulfill its obligations as a signato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bilized 80,000 servicemen in 1956, and took measures,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have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thdrawn in 1958.

In the early 1970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derailed the effortfully arranged North-South High-Level Talks and betrayed themselves in pursuing the "two Korea" policy. In this situation, howev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posed in March 1974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old bilateral talks at which to discuss ways to defuse military confrontation and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and moved further by addressing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 draft of the peace agreement intended for discussion at the proposed talks.

The proposal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rmed to be just and reasonable by a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Echoing this proposal, the 3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 resolution in November of 1975, calling for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south Korea,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the withdrawal of all the foreign troops from south Korea.

Pressed so hard by the strong world public, the United States, too, had no choice but to include (in its draft resolution submitted to the 30th Ses-

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e need to bring together all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to negotiate a new arrangement, that would substitute for the Armistice Agreement and help to de-escalate tensions and establish a lasting peace.

Later, the United States indicated its willingness to move toward defu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ripartite talk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also south Korea, instead of the Proposed bilateral talk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on express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mally announced an epoch-making proposal in January of 1984 to open tripartite talks by includ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on an equal footing in the proposed bilateral talk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t which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to sign a peace agreement on a bilateral basis, on one hand, and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to adopt an non-aggression declaration, on the other hand.

At the annu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October 199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ld the Session that it was high time for an innovative decision to be made for dissolv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south Korea and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proposed that negotiations be held among the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peace arrangement that will substitute for the existing truce arrangement.

Most recently, through the Statement of it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ated April 28 this yea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the United States that the two countries hold

negotiations for establishing a new peace arrangement that will help to guarantee peace reliably on a practical basis, stressing an urgent need to turn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as the present cease-fire arrangement is no longer in a position to prevent either arms buildup or military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ar from accepting all these just propos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ed to violate the Armistice Agreement by stepping up its military buildup and frequently staging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II.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ruce Mechanism

Have Been Paralyzed and Turned into worthless Instruments.

The United States, a real party to the Armistice Agreement, has systematical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ver the last 40 years.

Having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e "USA-ROK mutual Defense Assistance Treaty" in October of the same year with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an effort to legalize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On November 7, 1955, the United States side shot down a helicopter flying to Kimpo Airport on a regular inspection mission of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killing three Polish delegates of the Commission aboard the copter.

On June 9, 1956, the United States forced the Neutral Nations Inspection Teams to withdraw from the designated ports of entry in the United Nations Command-controlled area where the Teams had been statio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C of Article II of the Armistice Agreement, be-

cause the Teams were observing and reporting the violations of the Agreement by the United States.

It was since then that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was not able to carry out its missions mandat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ne 21, 1957 following the expulsion of the on-site Inspection Teams, the United States declared a unilateral non-compliance with Sub-paragraph 13th of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ruled out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the reinforcing operational material.

Sub-paragraph 13th of the Armistice Agreement stipulated that, the opposing sides "cease the introduction into Korea of reinforcing combat aircraft, armoured vehicles, weapons, and ammunition."

This is how the United States paved way for legal and administrative basis on which it could proceed with its unbridled arms buildup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since introduced into south Korea a massive quantity of sophisticated weapons, including 1,000 nuclear weapons without any restrictions.

It is none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that is responsible for the "USS Pueblo Incident", the "EC-121 Spyplane Incident" and the "Panmunjom Incident," incidents that precipitate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rink of war, thus focussing world's attention on the peninsula.

To make matters worse, on March 25, 1991, the United States unilaterally designated a south Korean army "general" as the chief delegate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despite his apparent disqualification because of legal irrelevance of his designation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is an open perfidy of paralyzing the military armistice mechanism and ignoring and ridiculing the other signato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response to th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no choice but to recall its chief delegate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uch an irresponsible behaviour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has only invalidated the provis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essential for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war and put the Agreement-implementing bodies out of operation.

Consequentl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as turned into a nominal body in which its legitimate component parties ceased to exist, and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reduced to blank sheets of paper incapable of helping to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ent-day reality is that both arms buildup and recurrence of war cannot be prevented by the obsolete armistice mechanism, which has turned out to be a tool of the cold war policy.

III. The State of Cease-fire Should Turn Into the State of a Lasting Peace.

Continued accountabi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bsence of a new security arrangement for practically guaranteeing peace are responsible for the uncertainty of Situation that has continued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the uncertainty of situation remains in place because the cold war structure has failed to give way to the structure of rapproch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established the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the real parties to the Agreement-as hostile relations.

In order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reate new peaceful relations replacing such hostile relations, it is

essential to terminate the cease-fire arrangement, which is the typical legacy of the cold war era, and develop a new peace arrangement.

This will help to eliminate the threat of an alleged "southward invasion" and a perceived "northward invasion" and to establish new relations of both rapprochement and mutual confidence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 that will dissipate confrontation and mistru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recommended the United States more than once through channels of contacts to consider instituting a new security arrangement, rather tha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f the armistice arrangement or reviving the inoperative cease-fire mechanism.

The United States has, however, refused to accept favourably the credible proposals and initiativ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 intention to maintain the state of cease-fire even in the present post-cold war era will be understood to be the intention to continue the cold war policy on the Korea peninsula.

It will also be regarded as the intention to move toward confrontation and war, instead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final analysis, the long-standing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pawned crucial issues including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plunging efforts to resolve the issues into impasse.

If the two countries had already ceased to be hostile to each other and normalized their relations, they would never have found themselves faced with those issues at all, and even though certain issues should have occurred if any,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issues without difficulty in an atmosphere of confidence. After all,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

insula, too, will be resolved smoothly only when it is addressed on a package approach in the perspective of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lls for an early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regime. There is no need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remain hostile nations, simply on the ground that they once fought a war.

At the first round of bilateral talks in June of 199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agreed to the principles of non-aggression, an indication that the two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need to do so.

Such being the case, there are no conditions that prevent the United States from legally terminating the state of cease-fire and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re might be several approaches to terminating the state of cease-fire. One of the universally recognized practices is that a belligerent party takes the initiative to terminate belligerency.

There are examples of countries having terminated their hostile relations that shaped up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Egypt and Pakistan, for instance, declared unilaterally the termination of the state of war with Germany in 1951,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ssued a decree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in January 1955, declaring its decision to terminate the state of war with Germany.

In the event tha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defiantly its reluctance to respond to the propos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erminating the state of cease-fire in favour of a new peace arrangement, the Democratic Peoples's Republic of Korea will be left with no alternative but to adopt, at a time it considers appropriate, measures to renounce unilaterally its status as a signato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1994. 5. 3)

최근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정전협정을 대미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행위는 쌍방 합의에 따라서만 정전협정을 수정·증보토록 되어 있는 정전협정 제61항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에 와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현 정전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현 정전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성실히 유지해야 하며 현 정전기구를 무용화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전협정의 대체를 포함한 현 정전체제의 전환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군정위 무용론 운운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법리에도 어긋나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문제는 실질당사자인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준수할 때 해결 가능한 것이며 이는 남북간의 엄숙한 합의사항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하루속히 핵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4. 5.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난 4월 28일 외교부 성명에서 우리가 내놓은 평화협상제안을 걸고든 것과 관련해서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현 조선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우기 위한 협상을 미국 측에 제기하는 우리 외교부 성명에 대한 국제적 반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를 훼방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남조선의 통일원장관과 외무부장관이라는 자는 평화보장체계 수립문제가 우리와 미국이 아니라 남북이 다루어야 할 문제라느니, 이번 제안이 제3단계 조·미 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라느니 하면서 법석 고아댔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자기 처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노는 주제넘은 행동이다.

공화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에 제기한 것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실제적 당사자도 미국이고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쥐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라는 법률적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데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정전협정체결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였고 또 실제상 남조선에서 완전한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평화협상에 참여할 아무런 권능이나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현 사태가 요구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반입한데 있으며 또한

현재 긴장상태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 무력증강을 가속화하고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있다.

이것은 현 조선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를 가지고서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지 못하고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군사적 대결만을 낳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만이 조·미 사이에 제기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북남 사이에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서가 채택되고 그에 따라 북남군사공동위원회가 조직된 조건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되면 그 이행을 보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문제도 완전히 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지난 4월 중순 조·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남 특사교환을 철회한다고 하면서 조·미 회담이 추진되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가 의제로 될 것이며 그때에는 북남대화도 잘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실천적 제안을 내놓으니까 그들은 이것을 무턱대고 반대해 나오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똑똑한 주견도 없고 형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하는 변덕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다.

오늘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국에 추종하지 않는 것이며 분수없이 아무데나 빠치면서 분주탕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53]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

(1994. 6. 3)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유엔사무총장 부트러스 부트러스 갈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엔사무총장 부트러스 부트러스 갈리 각하

존경하는 사무총장 각하

나는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4월 28일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낡은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상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말에 당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직접 확인한 바와같이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40년이상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새롭게 집중전개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욱 긴장해 지고 있으며 전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정전협정과 그 감시기구는 이러한 행동을 응당 제약하여야 하겠으나 미국측의 체계적인 유린말살행위로 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6년 조선정전협정 제2조 3항에 따라 해당한 출입항들에 주재하고 있는 중립국시찰소조들을 자기측 지역에서 강제추방하고 1957년 6월 21일에는 조선 경외로부터 증강하는 각종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규제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천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을 아무제한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에 반입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작전장비반입행위는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측은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여오다가 1991년 3월 25일에는 정전협정상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남조선군인을 일방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사정전기구를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여야할 정전협정의 기본조항들이 파기되었고 정전 감시기구도 유명무실해진 오늘의 현실은 위협계선에 들어선 사태를 수습하고 무력증강도, 새전쟁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도 교전 쌍방 사이의 전투행동을 정지시키는 것과 함께 앞으로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예견한 잠정적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1957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결의 3390-B를 채택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문제의 중국적 해결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매우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발기들과 협상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1992년에 북남 사이에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통하여 불가침이 확약되었으나 남조선에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는 아직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제약일방으로 되어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남조선에서 유엔의 평화유지사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우리를 고립·압살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주둔 미군이 유엔군으로 행세할 조건은 더는 없다고 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타당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쓸모없게 된 낡은 정전체계 대신에 새로운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측에 제기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동시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군측 인원들을 전부 소환하고 미군측과 진행할 새로운 협상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내오고 대표를 비롯한 해당성원들을 임명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새로운 안전보장체계를 세우는 데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혁신적이고 선의적인 조치이며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부나라들이 교전관계를 파기하고 평화관계를 선포한 공인된 국제관례도 고려한 평화애호적인 조치입니다.

나는 유엔이 자기성원국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불미한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데 대한 자기의 결의를 이행하는 의미에서나 우리의 제안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지금 일부나라들이 말하고 있는 핵문제는 사실상 유엔이 논할 대상이 아니며 조·미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유엔이 일부나라들의 부당한 요구대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그 누구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유엔은 유엔총회 제30차 회의 결의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과정을 다그치기위하여 낡은 정전구조의 기틀로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각하가 조·미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우리의 평화발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다시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54]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1994. 6. 10)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4월 28일부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국측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

을 막는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우리측 성원들을 전부소환하고 판문점에 조선인민군 대표부를 새로 내왔다.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측의 부당한 처사로 하여 조선정전협정이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현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기적절한 것이다.

미국측도 우리의 조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원들과 접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6일 미국측은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를 열데 대해 문제를 갑작스럽게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우리측 성원들을 전부 소환한데 대하여 미국측에 상기시키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일꾼들이 미군측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측은 저들끼리 회의장에 나타나 준비된 발언문을 읽고 우리측의 행동이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된다는 그 무슨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였다.

미국측의 이러한 행동은 정전협정과 정전기구를 체계적으로 파괴말살해온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기 위한 가소로운 연극에 불과하다.

사실상 지금에 와서 미국측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나 체면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3항에 따라 남조선의 해당한 출입항들에 주재하면서 군수물자의 반입과 반출정형을 감독·통제하던 중립국 시찰소조들을 1956년 6월에 강제 추방하였고 조선 영해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규제한 조선정전협정 제13조 ‘ㄱ’목의 이행을 1957년 6월에 파기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도 미국측이다.

정전협정상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를 완전히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지금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측이다.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들도 정전기구들을 일방적으로 거세 말살하여 온 미국측이 쌍방 사이에 합의에 대해 떠드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미국측에 의하여 무력증강도 전쟁재발도 막을 수 없게 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우리의 새로운 제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나 평화냐 하는 근본문제를 다루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측은 자기측에 의하여 다 죽은 송장과 같은 정전기구를 되살리려하기보다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대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측의 차후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55] 군사정전위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와 관련한 북한방송 보도

(1994. 9. 2, 평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특사인 외교부 송호경 부부장은 1994년 8월 30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중국 외교부 당가선 부부장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 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서 지난 40여년동안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온데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사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지원하였으며 전 후에는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을 통하여 조선 정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커다란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에 와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와 관련한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에 와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와 관련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특사인 송호경 부부장은 1994년 8월 30일 회의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을 받은 중국 외교부 당가선 부부장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선 정전협정의 체결 일방으로서 지난 40여년동안 조선반도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특사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지원하였으며 전후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 통하여 조선정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커다란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관계의 변화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야 할 절박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특사는 중국측에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상제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자기측 대표단을 소환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협상기구로 내오는 주동적인 대책을 취한 문제에 대하여 통보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을 조성하려는 선의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조선측의 요구와 조선측에서 이미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선측 대표단을 철수하였으며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제상 이미 마비된 현상태를 고려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아세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확인하였다.

보도는 이상과 같습니다.

[56] 외무부 대변인 논평

(1994. 9. 2)

정부는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국 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한데 대하여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국측이 동 소환 결정을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오면서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자국 대표단의 소환이 사무적인 조치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현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간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중국측도 인정하였다시피 중국측의 이번 결정이 현 정전협정체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준수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57]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4.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은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이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9. 9)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담화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얼마전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발표된 합의성명을 이행하여 조·미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해소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에 의한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전쟁위험이 날로 커가는 현상황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하루빨리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공화국정부는 지난 4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는 이미 제네바에서 진행된 3단계 조·미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하고 토의하였다.

공화국정부의 발기와 노력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오랜전에 북남 사이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된 조건에서 이제 우리와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남조선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공고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런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현실도 가려볼줄 모르고 저들의 처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수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이다.

[참 고 자 료]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북한문헌 발췌)

※ 출처 : (『현대국제법 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평양, 1988, pp. 158~174)에서 발췌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정지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왔다. 정전이 이룩되었어도 이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띤 위기일발의 정세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것을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35권, 344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오늘 성숙된 문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방도이며 나아가서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1) 조선정전협정의 의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승리입니다. 정전은 비록 조선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첫걸음으로 되며 긴장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첫 모범으로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8권, 14페이지)

정전협정의 체결로 조선에서는 3년여에 걸쳐 울리던 전쟁의 총포소리가 멎고 적대적 군사행동이 정지되었다.

미제는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 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당하였다.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치우려던 적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쓰디쓴 패배로 끝장났다. 미제는 하는수 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소에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쓰고 정전협정에 수표하였던 패전장군 클라크는 자기가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이 패배가 얼마나 뼈에 사무친 것이었던지 1983년에 정전협정조인 30돐을 앞두고 진행한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또다시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조선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를 인정하는 하나의 증거로 된다.

조선정전협정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만을 규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지난날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만을 규제하였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체결을 놓고 교전일방의 승리와 그 상대방의 패배에 대하여 말하기가 곤란하였다. 오직 전쟁의 승패가 항복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조선정전협정을 종래의 정전에 관한 개념으로 고찰하여서는 그 본질을 정확히 밝혀낼수 없다.

조선정전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정전협정은 이것을 성문화한 역사적 증거이며 기록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미제는 공화국북반부를 일격에 집어삼키려던 제놈들의 야망이 망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혁명적 전취물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또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되며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한 모범으로 된다.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지적하고있는 것처럼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고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정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이내에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규제하였다(정전협정 60항).

이러한 규정은 조선정전협정이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 정지를 규제한 것이 아니며 어느때든지 다시금 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하여 종래의 국제법규범에서 인정되었던 정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하였다.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정전을 보통 적대적 군사행동의 일시적인 정지로 간주하였으며 교전쌍방은 임의의 시각에 적대적 군사행동을 재개할수 있는것으로 여겼다. 1907년 룩전 법규과 관습에 관한 제4 헤그협약 부록 제5장 <정전에 관하여> 제36조에는 정전은 교전국들의 호상합의에 의한 군사행동의 정지라는것을 지적하고 만일(정전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교전국들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행동을 재개할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이전의 전쟁들에서 있었던 정전은 적대적 군사행동의 매우 불안정한 정지였다. 교전쌍방은 정전기간을 력량을 재수습, 재편성하는데 리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문제가 최종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규제하였다.

우선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과 남으로 각각 2키로메터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하나의 완충지대로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초래할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막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정전협정 12항부터 18항까지는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를 규정하였다.

정화의 구체적 조치는 하늘, 땅, 바다의 전전선에 걸쳐 적대적 군사행동을 정지하며 모든 군사인원과 군사장비들을 비무장지대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후 72시간안으로 철거시키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안과 연해도서들에 있는 쌍방의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들은 정전협정체결후(10일이내) 철거시키며 비무장지대안의 위협물은(45일이내) 제거하는것이였다. 또한 조선경외로부터 새로 증원하는 군사인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장비들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것이였다(정전협정 13항 ㄹ목). 만일 정전기

간에 파손 및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들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능과 유형의 것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우에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출입항을 통하여 교체하기로 되어 있다.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쌍방군사인원과 무장장비들의 교체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정형을 감시 및 시찰하며(정전협정 13항 ㄷ목과 ㄹ목에 대한 감독)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위반사건에 대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시찰소조를 조직하여 출입항들에 주재시키기로 되었다.

정전협정에는 쌍방무장력량이 상대방의 군사통제밑에 있는 륝지, 바다, 공중을 존중하며 정전협정조항들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전협정에 조인한 쌍방군사령관과 그 후임사령관들이 져야 한다는것도 밝혀져있다.

조선정전협정은 이와 같이 (정화) 및 정전의 공고성을 보장하며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의 정전협정으로 되었다.

조선정전은 또한 조선반도에서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데도 그 의의가 크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면서 노린 목적은 단순히 공화국북반부만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자는데만 있지 않았다. 놈들은 극동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을 튼튼히 닦으려는데도 중요한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미제의 이 기도는 조선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일단 포성을 멎게 됨으로써 산산조각이 났다. 조선전쟁은 힘으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굴복시키는데 습관된 미제를 두려워한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 인민들도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주체를 세워 용감히 싸운다면 능히 미제를 타승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조선인민의 승리와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알려지자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처럼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긴장한 국제정세의 완화에 기여하였을뿐아니라 미제로 하여

금 허장성세를 뽐낼것이 아니라 회담장에 나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은 국제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준것으로 하여 지난날의 정전들에서 순수 군사행동의 측면만을 규제하였던것과는 다른 특징을 띠고있다.

조선정전협정이 이전의 정전협정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것은 우리 시대의 국제적 력량관계와 자주시대의 기본요구가 반영되었기때문이다.

정전담판에서 우리 측은 적들의 간교한 술책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틀어쥐고나아갔다. 정전담판에 대한 적들의 태도와 립장은 정전을 일시적인 휴전으로 하고 력량을 재수습해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보 자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적들은 정전담판에서 부당한 요구를 들고나왔다가 우리측에 의해 여지없이 론박당할 때마다 담판장에서 꿈무니를 빼고 이른바 <하기공세>, <추기공세> 또는 그 무슨 <신공세> 따위의 군사적 공세를 들이대었다.

그러나 군사적 공세도 담판에서의 외교적 교활성도 성과를 거둘수 없게되자 적들은 우리측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제가 정전협정에다 정전을 단순한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로 규정하지 못하고 조선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정전으로,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허용하지 않을것을 목적인 정전으로 규제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그들이 조선문제의 평화적인 정치적해결에 그 무슨 관심이 있었거나 국제법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그 어떤 욕망이라도 있어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정전담판을 우리에게 먼저 제기하고 담판장에 환기를 들고나 온것은 조선전쟁에서 망신창이 된 제놈들의 신세를 어떻게 하나 건져보려는 심산 에서 그렇게 한것이다. 다시말하면 전선에서의 군사적 패배를 <외교적 승리>로 메꾸어보려는것이였다.

그러나 미제는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그 어떤 <승리>를 바랄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적들에게는 더 큰 패배가 안겨질 뿐이였다.

적들은 정치, 군사, 도덕적으로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서야 정전협정에 대 한 우리 측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정전협정의 매 조항에는 미제의 간교한 군사적 및 외교적 공세를 짓부신 우리의 진지한 노력, 견결한 투쟁성과가 아로새겨져있다.

조선정전협정은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요구대호가 아니라 자주력량, 신흥세력의 요구에 따라 국제법의 규범들이 제정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2) 미제의 정전협정위반책동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김일성저작집》24권, 141페이지)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돌아앉자마자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20분후인 1953년 7월 27일 22시 20분경에 전선동부에서 우리측 지역을 향하여 기관총사격을 가하였다.

적들은 정전후부터 지금까지 지상에서 비무장지대와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에 대하여 총포사격과 무장공격을 계속 감행하였다.

1967년 7월 16일에는 전선서부에서 37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중기관총의 엄호하에 수천발의 총사격을 가하면서 무려 13시간 30분동안이나 우리측에 무장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975년 6월에는 립진강하류일대에서 그 맞은편 우리측 군사통제지역에서 일하는 농장원들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를 향하여 1,000여발의 12.7머리기관총을 쏘대었다. 또한 적들은 1981년 4월 21일에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810호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측 민사행정경찰성원들을 향하여 무려 2만 3,000여발의 총포사격을 가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의 이러한 총포사격사건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우심해지고 있다.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정전후 1954년까지는 수백건이었다면 1961년에는 2,500여건, 1968년에는 1만여건, 1974년부터는 매해 2만 수천건에 달하였다. 정전

협정이 체결되어 30년간에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한 적들의 정전협정위반행위는 무려 37만 2,000여건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1968년 1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이씨-121>사건, 1976년 8월 <판문점사건> 등은 미제가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였으며 란폭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였다.

미제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쌍방 통제하의 륵지, 공중, 해상을 존중할데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을 유린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미제의 정전협정위반책동은 특히 정전협정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자기의 의무를 제멋대로 포기한데서 더욱 엄중하게 드러났다.

미제는 정전협정 60항에 예견된 정치회의의 소집을 고의적으로 태공하면서 이 회의 예비회담을 파탄시켰다. 정치회의의 기본목적은 미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것을 토의하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미제는 어떻게 하나 정치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에 예비회담장소에서 제멋대로 뺑소니쳤다. 이것자체가 정전협정위반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보다 앞서 1953년 8월 8일에는 남조선피뢰도당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한 음흉한 계획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예견된 정치회의가 소집된다하더라도 미제침략군을 <공약>에 의해 남조선에 그냥 눌러두겠다는것이였다. 미제가 남조선피뢰도당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은 명백히 정전협정에 대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정전협정의 중요한 일부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성명>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강화하였다.

놈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형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였다. 미제의 이러한 행위는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급해맞은 미제는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숙소에 폭탄을 던지며 지어 그들을 살해하는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제는 1956년 6월에 남조선출입항들에서 중립국시찰소조성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57년 6월 21일

에는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한다는것을 제멋대로 <성명>하였다. 당시 남조선 강점 미제8군사령관이었던 웬니찌는 《우리는 여러해에 걸쳐 노력한 결과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폐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신형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미제의 정전협정과기책동이 정전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미제의 파렴치한 행동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이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보충 및 폐기는 쌍방사령관들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진행되기로 되어있다. 그런것만큼 미제가 정전협정 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다고 떠드는것 자체가 비법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남조선에다 신형무기들을 마음대로 끌어들이려는 속심을 드러내놓은 것이었다.

사실상 미제는 이후부터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미제는 지금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포탄, 핵지뢰 등을 배치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비-52> 전략폭격기, <에프-16> 전투폭격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핵전쟁수단들을 끌어들이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배척받았던 중성자무기까지 반입하였다. 이리하여 지금 남조선에는 100평방키로메터당 1개이상의 핵무기가 전개되어있는데 이것은 핵무기가 집중되어있다는 <나토>지역보다 그 배비밀도가 4배나 높은것으로 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80년대 힘의 대결의 시험장>, <세계전략의 제1선>이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괴뢰도당에게 <공약상 의무>에 충실하겠노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어주었다. 미제는 정전협정이란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른바 <호상방위조약>에 근거한 <공약상 의무>만을 외위대면서 남조선에 신형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책동을 더욱더 강화하며 더많은 군사<원조>를 주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함께 막대한 병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4만여명의 침략군을 상시적으로 주둔시키고있는것 외에도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미명밑에 슬한 무력을 해마다 끌어들여서 불장난을 일삼고있다.

놈들이 해마다 벌려놓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는 막대한 병력이 동원되는데 여기에는 남조선주변에 배치된 미제침략군은 더 말할것도 없고 미국본토의 침략무력도 끌어오며 일본〈자위대〉 무력까지 동원시키고 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년 도	동원인원	기 간
1976	4만 6,000명 그중 미군 6,000명	10일
1977	8만 7,000명 그중 미군 1만 3,000명	15일
1978	11만 8,000명 그중 미군 4만 5,000명	17일
1979	14만여명 그중 미군 5만 6,000명	18일
1980	16만명 그중 미군 5만 4,000명	50일
1981	16만 1,500명 그중 미군 6만 1,500명	69일
1982	16만 9,000명 그중 미군 6만 1,600명	73일
1983	19만 1,700명 그중 미군 7만 3,700명	75일
1984	20만 7,500명 그중 미군 6만명	76일
1985	20여만명	2월 1일부터 4월중순까지
1986	20여만명 그중 미군 6만여명	2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1987	20여만명	2월 19일부터 5월초순까지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연습이다. 이것은 미제가 대단히 중시하고있는 〈나토〉 군사연습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

미제의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조선경외로부터 새로운 작전무기와 군사인원들을 들여오지 말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13항 d, e목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마구 짓밟아버리면서 조선반도에 전쟁

의 검은 구름을 몰고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미제의 정전협정위반행위와 정전협정조항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위력한 법적 문건으로는 도저히 역할할 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1953년 7월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지만 항구적평화에 대한 담보로는 될수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집〉 29권, 292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법적 문건으로서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교전국사이의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을 의미하는것으로는 되지 않기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정지를 규제한것이지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을 규제하지는 않았다. 정전으로써는 교전국사이의 전쟁상태가 가셔지고 평화관계가 회복될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할수 없다. 조선정전협정이 조선문제의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적 군사행동의 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코 교전쌍방사이의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국제법의 력사는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어야 교전국들사이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제반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교전국사이의 국가적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서는 그에 따르는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교전국사이의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지였다.

조선전쟁과 관련하여서도 응당 교전국사이에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35년이 지났어도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지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볼수 없다.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은 반드시 교전국사이에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의무를 규제하게 되며 교전국들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의 공고성을 보장하게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가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전쌍방이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그 공고성을 담보하는 그 어떤 법적 의무도 지니지 않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기화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격화되는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가 엄중한 지경에까지 긴장되어가고있다.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격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다.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은 그만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위업에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는 응당한 논리적 귀결이며 력사발전과 정세발전의 요구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은 또한 정전협정 그 자체가 낡았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결된지 오랜 낡아빠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져야 하며 미국군대는 남조선에서 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30권, 653페이지)

1953년 7월에 작성조인된 정전협정의 규정가운데는 35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것들도 있다.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미군사령관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를 띠었는데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결의안이 채택된후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었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것만큼 정전협정의 리행에 대해서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과 그의 후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전협정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뿐만아니라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시찰소 조가 추방된후 정전협정 13항 ㄷ, ㄹ목의 집행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감독 통제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실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의 미제의 군사시설구축책동과 각종 도발행동이 강화됨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쌍방의 적대적 군사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의의도 크게 가지지 못하고있다.

이상의 몇가지 사실들은 정전협정의 규정들이 낡았으며 미제의 새 전쟁준비 및 도발 책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전협정을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법적 기초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현대국제법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과 미국 두나라 인민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나 그리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요구와 념원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하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로 되어있다.

3)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인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되는것이 현실적이며 론리적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미국정부사이에 서로 무력행사

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30권, 433페이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교전일방이며 평화협정체결의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의 철갑모를 씌우고 유엔기발을 쥐여서 그들을 조선전선에 내몰았으나 이것은 철두철미 날조된 비법적인 유엔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었다. 〈유엔군〉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미국방성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미제의 침략군이였다.

그것은 우선 〈유엔군〉조작에 관한 유엔의 〈결정〉이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현장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날치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미제는 면밀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유엔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조선전쟁을 〈국제화〉하는 길에 서슴없이 뛰어 들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1950년 6월 25일, 27일, 7월 7일 련이어 유엔안보보장리사회를 벌려놓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략자〉라느니, 미군은 〈경찰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느니, 미국이 통수권을 틀어쥐는 〈유엔군〉을 조작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결정〉을 꾸며내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짜놓은 각본에 근거한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정〉들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무력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한 것은 유엔의 〈결정〉이 채택되기전부터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유엔의 〈결정〉에 근거하여 그 무슨 〈경찰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한 미제는 유엔〈결정〉을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안보리사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유엔헌장 제 32 조에 의하면 안보리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 28 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 1일 유엔총회 제 28 차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엔<결정>의 비법성은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일치가결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참가없이, 그들의 찬동이 없이 <결정>이 날치기로 <채택>되었다는데 있다.

당시 소련은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의 원칙과 유엔헌장의 기본요구에 맞게 안전보장리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사업 전반을 반대하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본 다마가와 백과대사전(세계력사편)에서는 《유엔안보리사회는 소련이 회의를 보이코트하여 결석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군의 조선출병을 결의하였다.》라고 썼다.

19세기 70년대 아일랜드농민들이 악질지주들에 대한 집단적 반대배격운동을 벌였는데 그 첫 투쟁대상이 영국대위 보이코트였다. 이때부터 보이코트란 말은 <반대배격>이란 뜻으로 쓰이고있다.

미제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조선문제>를 강압통과시킬 당시 상임리사국인 소련이 이 토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기권이 아니라 반대 의사표시이다.

상임리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미제의 부당한 책동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대만은 중국령토의 한 부분이다.

<두개의 중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전 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

기구들에서 이전 중국 의석을 그대로 계승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중국인민을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장개석 도당을 유엔의 중국의석에 눌러 앉혀놓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합법적 의석회복을 각방으로 집요하게 반대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부당성은 그들이 펴 늦게나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한데서 여실히 증시되었다. 1978년 12월에 발표된 중-미공동콤뮈니케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것을 언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벌써 미국이 취했어야 할 립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는 창건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조건에서 미제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의석회복문제를 반대한것이 얼마나 부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명백히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온갖 비법성에 기초하여 날조된 유엔<결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유엔군>은 실제적인 유엔군이 아니라 미제침략군과 미제의 충알받이인 추종국가 군대였다.

사실 조선전선에 기여든 <유엔군>에 대하여 유엔은 아무런 통제도 한적이 없으며 또 통제할 권한도 가지고있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유엔군>의 작전, 지휘, 통솔 및 그에 대한 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적 통제와 지휘는 미제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한때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뒤집어쓰고 날치던 패전장군 맥아더는 1951년 미국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명목적인것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유엔본부 대변인까지도 남조선에 있는 미군사령부를 《유엔군 사령부》로 부르는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만 미군과 미국의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모자를 씌워놓았다는

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정전후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더욱 회피할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정전후 <유엔군> 산하에 있었다는 것은 미군 뿐이고 다른 나라 군대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유엔군>이자 곧 미군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았다. 이 뿐아니라 1975년 유엔총회 제 30 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어 미제침략군이 쓰고있는 <유엔군>이란 이름을 벗겨버림으로써 미국이 조선전쟁의 일방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졌다.

미제는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가 일정에 올라 대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게 되자 그 이전까지 남조선주둔 미군이 <유엔군>에 속한듯이 떠들던 론조를 집어치우고 <유엔군>과 미군이 다르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놈들은 <유엔군사령>가 해체되여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자주시대의 흐름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소리를 쳤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논리적 견지에서 보나 조선전쟁의 일방이며 조선정정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결코 그것을 회피하여서는 안될 법적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 3월에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편지를 미국국회에 보냈다. 편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쌍방회담에서 토의한 평화협정의 기본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펍 늦어서야 쌍방회담이 아니라 3자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1976년 8월에 당시 미국무장관이 3자회담에 대해서 들고나왔다. 그후 1978년 3월에 미국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대표들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79년 7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 사이의 <고위당국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1983년 9월에 미국은 제3국을 통하여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있으며 이 회담에 남조선도 동등하게 참가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대통령 레간자신도 1983년 11월에 남조선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3자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측이 표명한 이와 같은 공식적 입장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고 3자회담을 하루빨리 열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연합회의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이 담겨져있다.

1984년 1월 하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 7기 제 3차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3자회담제안을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이 언제 열릴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측의 성의와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평화협정은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선포하게 되는것만큼 지금까지의 강화조약의 규범이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응당 손해배상문제, 전범자처단문제등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킬수 있다.

미제가 3년여의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놈들은 한 평방키로메터에 평균 18개의 폭탄을 떨어구어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빼앗아갔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히틀러 도당의 만행

보다 더 훨씬 악랄하고 간혹하였다. 미제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 세균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쟁포로들을 세균무기의 실험대상으로 대량 학살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종결과 함께 계산되고 결산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규범이고 관례였다. 조선인민은 미제를 상대로 전쟁배상청구권과 전범자처벌권을 행사한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렇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되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마련되기를 갈망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을 고려하여, 그리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전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내용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보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에서는 우선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공식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1950년대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가셔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며 남조선 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여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킬수 있는 기본 화근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인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있는것을 원치않고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태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세가 긴장되던 끝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인민에게도 리로울것이 없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에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장애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격화의 근원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의 분렬, 조선민족의 분단의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이 분렬과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동지를 틀고앉아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후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초긴장상태를 여러번 조성

하였으며 조선에다 전쟁의 검은 구름을 항시적으로 몰아오고있다.

일제 패망후 40여년의 력사는 미군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과 미국 사이의 전쟁상태를 끝장내는 기본조건의 하나로서 반드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 문제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협정에서는 또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것이 필요하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군축제안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의 중지제안을 비롯한 일련의 건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긴장되게 되는 근본화근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는 군사연습과 <원조>의 미명밑에 신형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반입한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목적을 가지는 평화협정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 무기반입책동을 금지하는 문제를 규제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나라의 군사기지건설도 허용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것이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외세는 조선의 분렬을 가져왔다.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력사적 교훈은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평화의 공고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원칙은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의 하나인 것만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과 각종 비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 통수권을 틀어쥐고있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코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될수 없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도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

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정책 실현에서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에서 비행기, 대포, 함선 등이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하고 출동준비를 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기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이와 같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선인민은 물론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만일 미국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자회담 제안과 평화협정 제안에 선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체면을 손상시킴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댈수 있게 될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관련 자료집

인 쇄 1994년 12월 10일

발 행 1994년 12월 15일

발행처 남북회담사무국
운 영 1 부
정 치 회 담 과
(전화 730-3658)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